

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기본소득
2023 여름
#016

기본소득
제 22차

지구

네트워크

현실 속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REALITY

대회

2023. 8. 23.~ 8. 26. 서울

📍 오프라인 대한민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 온라인 줌 이벤트
"22nd BIEN Congress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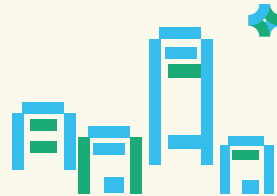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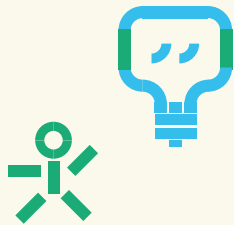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16

C O N T E N T S

머리글	006	상선방류(上善放流)? _ 이관형
이 계절의 이슈 1.: 제22차 지구네트워크 (BIEN) 대회	007	Basic Income: Sufficient Evidence, Now the Politics(기본소득: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제는 정치다) _ 가이 스탠딩/번역 안효상
	015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관하여 _ 백승호
	019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현실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곳 _ 양치혜
이 계절의 이슈 2.: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025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_ 안효상
	030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_ 금민
	033	Das Grundeinkommen als Instrument de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사회·생태적 전환의 도구로서 기본소득) _ 다그마 파터노가/번역 이관형
	040	탄소배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생태적 전환의 도구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문 _ 이건민
	042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논점	046	공유지론에 기본소득론을 더해야 하는 이유 _ 서정희
문학	051	[시] 함께자리 (외 1) _ 천양희
	053	[시] 이상한 열매 _ 최지인
	054	[짧은 소설] 이웃들 _ 조경란
팔매통신	060	월드코인과 기본소득,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_ 한인정
특별기고	065	녹색 정치에는 조국이 없다 -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 참가기 _ 김찬휘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071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꿈 _ 이경수
	076	저출생시대 생태사상으로서의 기본소득 _ 김명하
기본소득과 나	080	기본소득과 나 _ 이지상
기본소득의 새로운 자평	084	기본소득,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_ 김병수

상선방류(上善放流)?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노자老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한다.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다투지 않는다. 물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도 편안히 머문다. 물의 이런 속성은 자연의 이치이자 인간이 따라야 할 이치인, 도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말은 말 그대로 늙은이(노자)의 낡은 말이 된다. 이 시대는 불(火)의 시대다. 온 세상이 절절 끓는다.(시베리아가 40도? 레알? 레알!) 남반구,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가뭄과 결부된 큰 불이 끊이지 않는다. 이 시대는 물도 불같이 화를 내는 시대다. 노자는,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는 못한다(취우불종일(驟雨不終日))”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정도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쏟아 붓는 비가 흔하다. 물은 더 이상 ‘편안히 머물지’ 않는다. 가뭄과 홍수의 극단을 오간다. 화를 넘어 조증(mania)과 울증(depression)을 오가는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상태라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한다. 일본 측 방류는 리에는 한국과 중국의 원전에서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후쿠시마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것도 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피장파장에 의한 논변’ 혹은 ‘피장파장의 오류’다. 너희들은 다 방류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말이다. 논리학에서는 이런 논변(argument)을 대표적인 ‘오류’(fallacy)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오염수 방류가 잘못된 행동이라면 너도 나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너도 나도 다 해도 좋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한국과 중국의 원전에서 이미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면, 그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소위 원전 강국들이 그러하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방류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괴이한 양심(?)에 따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일본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도 협력하지 못하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생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번호는 먼저, 8월 23일에서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서울대회 참관기, 진행상황,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 등을 다룬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6일 독일금융과세시민연합,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한국 및 독일 네트워크 등이 공동개최한, 한독학술교류 온라인 컨퍼런스 “기후정의와 기본소득”을 게재한다.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장이 “공유지, 공유화, 공유부 배당”관련 논점을 알려주며, 간판코너가 된 문학에서는 천양희, 최지인 시인과 조경란 작가의 귀한 글을 볼 수 있다.

한인정은 어김없이 팔메통신으로 우리를 찾는다. 한국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2023세계 녹색당 총회의 이모저모를 전한다. 문학평론가 이경수 중앙대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꿈”을 피력하며, 김명하, 이지상 두 분이 “기본소득과 나”, 김병수 선생이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에 소중한 글을 보내온다. 유감스럽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 인터뷰가 빠진다. 독자의 혜량을 바란다.

BasicIncome Issue 1.

[기획자의 말]

미래의 역사가들은 아마도 2023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를 파국으로 치닫던 지구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선회시킨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행사가 곧, 그것도 이곳에서 열린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

지금 지구는 ‘임박한 파국’, ‘파멸 전야’ 혹은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구의 안전판이 균열되는 조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코비드19는 임박한 파국의 준엄한 예고편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길을 찾는 것이다. 모든 걸 망쳐 놓은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중에는 위기적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혁신적인 정책들이 여럿이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여럿 중 가장 다양한 곳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고 시도된 것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이다. 말하자면 위기적 상황 때문에 유쾌한 상상이었던 기본소득이 이미 현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이다. 앞질러 말하자면 현실 안으로 들어온 기본소득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벤야민이 말한 ‘역사의 천사’같다고나 할까.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혁신할 만한 가시적이고 대안적인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다. 동시에 그를 통해 기본소득이 이제는 ‘파일럿’ 단계의 실험 정도가 아닌 전면적 시행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의 유일한 대안적 정책임을 충분히 증명해내고 있기도 하다.

이번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가 대회의 주제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내세운 것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한 절박함으로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실험되고 시행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살펴보고 기본소득을 전지구적으로 시행할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 대회가 기본소득의 전지구적 도입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반복하지만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대주제를 걸고 진행되는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는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운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역사적인 대회이다. 이 대회가 가지는 의미와 기대, 그리고 향후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가이 스탠딩, 백승호, 양지혜님이 오랜 기간 정련한 생각을 가다듬어 주셨다. 경청할 것이 많다. 감사드린다.

Basic Income: Sufficient Evidence, Now the Politics

기본소득: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제는 정치다

Guy Standing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의장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In 1942, as people started to think about remaking society after the World War, William Beveridge wrote a report for the British government that was to shape the welfare state in Europe. He wrote, 'It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patching.' What he meant was that it was useless to make minor changes to the old system. A new system was needed. The evidence was clear.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사고하기 시작한 1942년에 윌리엄 비버리지는 영국 정부를 위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가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게 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지금은 수선할 때가 아니라 혁명을 할 때이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낡은 체제에 소소한 변화를 가하는 일은 쓸모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Today, we are at a similar juncture. The social policies of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re simply outdated. Selective policies for what economists call 'contingency risks', such as a spell of unemployment, an illness or an accident, do not deal with the defining challenges of our age. We live at a time of

rentier capitalism, in which more and more of income being generated goes to those who possess property – physical, financial or intellectual – while less and less goes to those who rely on labour and work for their incomes.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시점에 있다. 20세기 후반의 사회 정책은 그야말로 남아버렸다. 일시 실업, 질병, 사고 같이 경제학자들이 “우발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선별적 정책들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과제를 다루지 못한다. 우리는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출되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물리적, 금융적, 지적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반면 소득을 노동과 일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소득만이 흘러간다.

Coupled with this structural inequality, a new class structure has taken shape, with a tiny plutocracy of absurdly rich people facing a growing precariat experiencing chronic insecurities and a steady erosion of social, civil, economic and political rights.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과 함께 새로운 계급 구조가 모습을 갖추었는데, 부조리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금권정치가 만성적인 불안전 그리고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지속적인 침식을 경험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프레카리아트와 직면하고 있다.

Above all, we are living in an age of chronic *uncertainty*, best portrayed in terms of ‘unknown unknowns’, that is, millions of people, particularly in the precariat, face constant anxiety and stress due to a high probability of being adversely hit by some unanticipated shock, not knowing if they will be able to cope with the consequences or recover from them.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되는 만성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프레카리아트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충격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지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

This is why basic income has moved to the centre of progressive social thinking. Sensible policy makers and commentators are realising that most people are ‘at risk’ and insurance schemes are inappropriate for responding to uncertainty. A healthy society is one in which as many people as possible have basic *security*.

이것이 기본소득이 진보적인 사회사상의 중심부로 들어온 이유이다. 분별 있는 정책 입안자와 논평가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보험 제도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있다. 건강한 사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보장을 받는 사회이다.

It is not good enough for governments to say that if you become poor some aid will be provided. We know means-tested social assistance fails to offer a real social safety net. Too many people are excluded, there is always a big poverty trap and there is too much uncertainty about what if anything you will receive.

정부가 만약 당신이 가난해지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산심사 사회부조가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며, 언제나 커다란 빈곤의 덫이 있으며, 무엇을 받게 될지에 관해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Between August 23 and 25,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will hold its 23rd Congress in Seoul. It is a remarkably opportune moment. Something wonderful has been happening, amounting potentially to a revolution by stealth. Particularly since Covid hit, there has been an acceleration in the number of basic income pilots and experiments around the world.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서울에서 대회Congress를 개최한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다.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혁명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특히 코로나 충격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과 실험이 크게 늘어났다.

What is remarkable is that a majority of them have been taking place in a country that until recently was one where there had long been very little support for basic income. That country is the United States. Today, about one hundred experiments are taking place there, or are just completed or about to start.

눈에 띄는 점은 그런 파일럿과 실험 가운데 대다수가 최근까지 기본소득을 거의 지지하지 않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미국이다. 오늘날 약 100개의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막 완료되었거나,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As of early 2023, over 100 cities in 32 States had experiments. In California alone, there are over 40 schemes, giving over 12,000 people basic incomes, costing over \$180 million in public and private funds.¹⁾ The drive has been led by the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scheme. But those Mayors are not alone. There are over 50 other experiments, in States as different as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Georgia, New Mexico, New York and Texas.

1) J.Kuang, 'More than 12,000 Californians are getting cash from guaranteed income experiments', CAL Matters, 4 February 2023.

And at least eight schemes are about to start. Several of the schemes are those leaving care homes, similar to a pilot in Wales, where the devolved government is giving a generous basic income to hundreds of young people.

2023년 초를 기준으로 32개 주에서 100개 넘는 도시가 실험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40개 넘는 파일럿이 있는데, 1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며,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이 소요된다.¹⁾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 모임”의 계획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조지아, 뉴멕시코 같은 여러 주들에서 50개가 넘는 또 다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8개의 파일럿이 실시될 것이다. 이 계획 가운데 몇몇은 보육원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는 웨일스의 파일럿과 유사하다. 웨일스에서는 책임을 맡은 정부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 관대한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In addition, there have been pilot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Europe. Results from evaluations are pouring in. The evidence is clear. It is so clear that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we have sufficient. The challenge next is political.

덧붙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도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증거는 명백하다. 충분하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분명하다. 다음 과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What is the evidence? Overwhelmingly, regardless of the design or selected group, a key result is *improved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is is immensely relevant since in the era of uncertainty there has been rising morbidity and a rising mortality rate in Britain, the USA and in some other countries.²⁾ Pilots in Arkansas and New York, echoing a result found in a big pilot in Manitoba, have report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use of healthcare facilities.

무엇이 증거인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실험] 설계나 선택된 집단과 상관없이 핵심적인 결과는 개선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영국, 미국, 기타 몇몇 나라에서 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래 이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것이다.²⁾ 아칸소와 뉴욕의 파일럿은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대규모 실험에서 발견된 결과를 다시 보여주듯이 의료시설 이용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고했다.

Another common finding is improved *housing security*. Property owners are more prepared to rent to people with an assured income, and basic income recipients are more

2)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3/03/09/britain-has-endured-a-decade-of-early-deaths-why>

prepared to take the risk of renting. Projects in Vancouver, California and Oregon, drawing on the success of one in the City of London in 2010, have also shown the homeless moving off the streets.

또 다른 공통된 결과는 개선된 주거 보장이다. 주택 소유자는 보장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게 되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임대료 부담의 위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런던 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에 기대어 실시한 밴쿠버,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도 홈리스가 거리를 떠난 것을 보여주었다.

Children are major beneficiaries. A pilot in Washington DC found baby health was improved. One in Mississippi found mothers were spending more on school supplies. Most dramatic of all has been the finding from an ongoing pilot that began in North Carolina in 1996 that children in families receiving basic incomes were on average one year ahead in school by age 16.

아동이 가장 큰 수혜자이다. 워싱턴 디시의 파일럿은 아기의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미시시피주의 파일럿에서는 엄마들이 학용품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결과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1996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파일럿의 결과인데, 기본소득을 받는 가족 내의 아동이 16세까지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는 아동에 비해] 1년을 앞서나갔다.

Schemes have shown that many recipients use their basic income to reduce life-constraining debt. In Austin, Texas, half the recipients did so, a majority by 75% or more.³⁾ Recipients also reduced debt in a scheme in San Antonio.

파일럿들은 많은 수급자가 기본소득을 삶을 짓누르는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는 절반의 수급자가 그렇게 했는데, 75퍼센트나 그 이상 부채를 줄였다.³⁾ 샌안토니오의 파일럿에서도 수급자가 부채를 줄였다.

There has been anecdotal evidence that individual basic income has enabled some women to walk out of abusive relationships and women in general to have a greater sense of financial independence.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부 여성이 학대받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여성 일반은 더 큰 재정적 독립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일화적인 증거가 있다.

3) UpTogether, July 2022. <https://connect.uptogether.org/central-tx/housing-stability.html>

Finally, contrary to widespread prejudice,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that basic income results in *more work, not less*. Part of the reason is that recipients have more confidence and energy. Partly it is because there is no poverty trap and precarity trap; people retain their basic income if they increase their labour and work.

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편견과는 반대로 기본소득이 일을 더 적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게 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급자가 확신과 에너지를 좀 더 가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빈곤의 덫과 불안정성(precariety)의 덫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동과 일을 늘리더라도 기본소득을 유지한다.

In a big experiment in Ontario, al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tried to suppress the evaluation evidence, the data showed that recipients had continued to labour and many had increased it.⁴⁾ But perhaps the most famous pilot, in terms of media coverage, was on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Finland between 2017 and 2019, under which 2,000 randomly selected unemployed received 560 euros a month.

온타리오 주의 대규모 실험에서는 주 정부가 평가 증거들을 은폐하려 했지만 수급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늘렸다는 데이터가 있다.⁴⁾ 그러나 미디어가 다른 점에서 가장 유명한 파일럿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핀란드 정부가 실시한 것으로서, 임의로 선별된 2천 명의 실업자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한 일이다.

Typifying the prejudice of the mainstream media, the Guardian and BBC announced in mid-2018 that it had been abandoned as a failure. This was false. It began on the day planned and ended precisely two years later, as planned at the outset. Rigorous evaluation showed that the unemployed did not reduce their economic activity and experienced an improvement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⁵⁾ Even though a new centre-right government had introduced an ‘activation’ scheme to pressure the unemployed to take jobs, at the end of the pilot the employment rate of the basic income recipients, who had not been subject to that pressure, was no lower than for those threatened with sanctions.

주류 미디어의 편견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디언》과 BBC는 2018년 중반에 이 파일럿이 실패로 돌아가 폐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거짓이었다. 이 파일럿은 계획된 날짜에 시작되었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2년 후에 종료되었다. 엄격한 평가를 보면 실업자들은 경제 활동을 줄이지 않

4) D.Takema, ‘People kept working, became healthier while on basic income support’, CBC News, 5 March 2020. <https://www.cbc.ca/news/canada/hamilton/basic-income-mcmaster-report-1.5485729>

5) O.Kangas et al (eds.), *Experimenting with Unconditional Basic Income* (Cheltenham, Edward Elgar, 2021).

있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개선을 경험했다.⁵⁾ 새로운 중도우파 정부가 실업자가 일자리를 가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파일럿 종료 시점에 이런 압력을 받지 않았던 기본소득 수급자의 실업률은 제재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률보다 더 높지 않았다.

There is not space here to deal with other findings. But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pilots have found increased work, improved nutrition, health, schooling and sanitation, and an emancipatory effect among women, minorities and those with disabilities.

여기서 다른 결과들을 다룰 여유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본소득 파일럿은 증대된 일, 개선된 영양, 건강, 학교 교육, 위생 그리고 여성, 소수자, 장애인들에게 해방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In short, if governments were genuine in saying they will apply ‘evidence-based policy’, we would have a basic income system already. But the political Canutes are just holding back the waves. It is this that demands our campaigning attention now. Most politicians are not real leaders. They follow what they think is the public mood or what they think will improve their chances of being elected. They tend to be opportunistic rather than principled.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y are cowards or corrupt or amoral. But too many have what might be called *spaghetti backbones*, that is, weak moral abilities.

요컨대 정부가 “증거 기반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데 진심이라면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언장담하는 정치가들은 그저 물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캠페인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 대부분의 정치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중의 분위기 혹은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따른다. 그들은 원칙적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이 반드시 겁쟁이라거나 부패했다거나 부도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치가들이 스파게티 등뼈라고 부르는 것, 즉 취약한 도덕 능력을 가지고 있다.

Some are definitely not like that. And here they should take heart. Opinion polls in many countries are showing that majorities of adults are in favour of basic income. And whereas ten or twenty years ago, most people did not know what ‘basic income’ meant, now very many people do know.

일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많은 나라의 여론 조사를 보면 대다수 성인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모르던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비해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알고 있다.

What is holding us back is that still too many commentators do not really know. Prejudice still comes in many newspaper articles and in hasty comment on social media. But many more people are in a position to counter that prejudice. In particular, young educated members of the precariat are speaking up. Many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nside the country, are able to point to Gyeonggi Province, where 125,000 young people are receiving basic incomes.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논평자들이 실제로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신문 기사와 소셜 미디어의 경솔한 논평에는 편견이 여전하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에 맞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프레카리아트 대열에 있는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를 거론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125,000명의 젊은이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Let me end this article with a prediction. There could be a domino effect. When just a very few countries introduce a basic income, many more will quickly follow. As shown elsewhere, and as will be summarised in a speech in the BIEN Congress in August, the optimum way of affording a basic income system will be by creating Commons Capital Funds.⁶⁾

예측으로 이 글을 끝내려 한다.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몇몇 나라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재빨리 뒤를 이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이미 밝혔고, 8월에 있을 BIEN 대회 발표에서 간추려서 말하겠지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최적의 방법은 공유지 자본 기금 Commons Capital Funds 을 만드는 것이다.⁶⁾

Today, two very different countries have announced they will be introducing a basic income in the very near future – Barbados and South Africa. Perhaps they will be the first dominoes to fall. The health and happiness of people and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ir countries will be dramatically improved. Let us build the momentum and a civilising future.

오늘날 아주 성격이 다른 두 나라인 바베이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기본 소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 이 두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은 극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를 위한 운동 그리고 문명화된 미래를 만들어내자.

6) G.Standing, The Blue Commons: Rescuing the Economy of the Sea (London, Pelican, 2023).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관하여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BIEN대회 프로그램위원회 공동위원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대회가 올해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BIEN은 현재 전 세계에서 35개 나라 및 유럽네트워크, 세계기본소득(World Basic Income)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제13차 BIEN 대회에서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되었고, 2016년 제16차 BIEN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6년에 이어 7년 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2차 BIEN 대회입니다.

BIEN대회의 의의는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가, 연구자들이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의 기회를 공유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입니다. BIEN 대회를 알리는 소개문에는 이번 대회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전지구적 실현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왔던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을 단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신 온몸으로, 온몸으로 ‘현실 속의 기본소득’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지난 십여 년 사이 우리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파일럿, 부분적

인 제도적 실시, 정치적 진전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그 시도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유토피아 원리로서의 기본소득이 현실로 내려왔을 때 어떠한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는지, 어떠한 정치적 역동이 전개되는지, 어떠한 대안적 성과들을 얻어내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현실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대주제하에 BIEN 대회는 전체 세션과 개별세션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전체세션은 BIEN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션입니다. 전체세션은 총 11개국의 연사들이 참여합니다.

한국 발표자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전 이사장님과 안효상 현 이사장님, 한국 기본소득을 이론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 연구자이자 실천가이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님과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님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등이 전체 세션의 기조발제자로 참여합니다.

해외 연사들로는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인물들인 애니 밀러,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마모리 도루, 루이즈 하그, 마이클 터브스, 사라트 다발라, 스콧 샌턴스, 알마즈 젤레케,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 조르헤 핀투, 호베르투 메릴이 현실속의 기본소득에 대한 뛰어난 통찰들을 제시해줄 예정입니다.

전체 세션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세션 1. 정치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치

전체세션 2.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전체세션 3. 문턱에선 기본소득: 정책, 실험, 입법

전체세션 4.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전체세션 5. 한국의 기본소득

전체세션 6. 기본소득 실험들: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전체세션 7.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 의미와 전망

개별 세션은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가 및 연구자, 일반시민들로 부터 발표신청을 받아, 프로그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개국 140여개의 발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개별 세션은 같은 시간대에 2~4개의 소주제들 발표가 진행됩니다.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의 변화,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세션1)
 현실에서 기본소득 프레이밍하기(세션 2, 세션 5)
 기본소득과 창조적 예술(세션 3)
 한국 맥락에서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보편적 EITC의 통합모델(세션 4, 35)
 기본소득, 기후 정의, 정치철학(세션 6)
 기본소득, 불평등 빈곤(세션 7, 9, 18, 21, 25)
 공유지와 기본소득(세션 8)
 기본소득, 불평등, 정치(세션 10)
 기본소득과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세션 11)
 현실속의 기본소득(세션 12)
 기본소득, 공유지, 공유화(세션 13),
 기본소득과 젠더(세션 15)
 기본소득의 경제학(세션 16, 세션 22)
 청년정치와 기본소득: “나는 왜 기본소득 정치를 하는가?”(세션 17)
 기본소득의 정치학(세션 19, 23, 28, 29, 30)
 보편적 기본소득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세션 20)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적 접근: 질적-재구성적 연구의 경우는?(세션 24)
 기본소득운동과 사례연구(세션 26), 기본소득 국가 사례: 한국(세션 27)
 기본소득, 기후정의, 자원마련(세션 31)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세션 32)
 문학과 기본소득: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세션 33)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별 사례연구(세션 34)
 워크프리:인도기본소득의 경험(세션 36)

지금까지의 어느 BIEN대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흥미로운 주제들과 훌륭한 연사들 그리고 탄탄한 대회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일 동안의 기본소득 대장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관들이 대회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후원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면서 대회 자원마련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전남과 서울 공동개최 추진이 물거품이 되었고, 국회에서의 개회식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여러 조직들의 십시일반 후원과 역할분담을 통해 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홍

보대사(이선배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소통담당) 및 시민사회 자문단, 기본소득당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고, 국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흔쾌히 지원해준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상적인 기본소득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들이 이번 BIEN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단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독자 여러분. ‘현실 속의 기본소득’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현실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곳

양지혜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비서관

기본소득 정치가 태동한 순간

“2016년은 기본소득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¹⁾

과연 그랬다. 2016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대회가 열리는 해였다. 포스터에는 기본소득을 처음 공부할 때, 책으로만 접했던 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친구가 일상을 보내는 대학의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니 신기했다. 어쩌면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일지 몰랐다.

기본소득을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궁금한 게 많았다. 2016년은 인공지능 ‘알파고’가 출현했던 해였다. 6월 5일에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가 치러졌고, 스위스 국민의 23%가 기본소득에 동의했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중심사회의 한계가 폭로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고 있었다. 생동감 넘치는 전세계의 풍경이 대한민국의 민국에 모여든다니 그 자체로 기대가 됐다.

1) 2016년 7월 6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판 파레이스’의 발언을 인용.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의 경제모델,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확대,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 ▲노동 사회의 전환,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시민권 강화 등에 있어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돌아보는 장이었다. 고백하자면, 대회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오랫동안 통역기를 쫓느라 귀가 저렸고, 때로는 말의 속도가 빨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논의는 흥미로웠다. 세계 각지에서 현재진행형인 기본소득 실험과 시도, 담론과 정치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 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더 많은 질문이 남는 포럼이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 기본소득의 개념과 지향점에 대해 논의했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본소득의 특징에 정기성, 현금성이 추가되었다. 충분성을 비롯한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지급액수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는 ‘기본소득은 물질적 빈곤을 해소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현존하는 복지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담겼다.

기본소득 정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왔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기본소득 정치’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2016년 대회에서는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국회 연설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했다”며 “다가올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춘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8월 말, 국회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7년이 지난 지금, 기본소득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연구포럼이 발족하기도 했다.

제16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이후, 정치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시작된 ‘성남 청년배당’을 계기로, 청년·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신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지역의 특색이 고려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20대 대선에는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가 무려 2명이나 등장했다. 각 후보의 정책은 충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소득을 사회적 전환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만큼은 같았다.

기본소득이 ‘미래에서 날아와 우리 곁에 도래’²⁾했음에도(혹은 도래했기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본소득이 만들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살펴보고 논의하기 어려웠다. 지난 7년 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이어졌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어려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²⁾의 주제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인 이유이며, 개최지가 ‘대한민국’인 이유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제도화’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올 여름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서울에서 치러진 뒤, 7년 간 대한민국이 겪은 변화와 시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협업할 방안을 논의하는 계절이 될 것이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에서 기본소득 정치인으로

2016년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세계적 규모의 학술 대회였다. 제16차 대회에 참여할 당시, 나는 학자도, 연구자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학생도 아니었다. ‘내가 갈만한 자리인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을 구축해나가는 이들은 내 예상보다 다양했다.

세션의 논의를 이끄는 사람은 학자나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당사자나 활동가이기도 했다. 수입이 불안정한 청소년, 청년, 활동가에게는 참가비를 할인해주기도 했다. 서로 다른 지평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말할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꺼이 마이크를 건네받는 자리였다. (긴 행사가 지루하기는 했지만) 학술대회라 ‘딱딱할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였던 나도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 청년운동,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세션 발제자로 함께했다. 청소년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마음을 나눴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는 무엇인지 토론했다. 밤새 커피를 마시며 열기설기 채웠던 발제문은 서툴렀고, 긴장한 나는 발표 시간을 한참 넘겼다. 그렇지만 청중들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가진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었다.

2)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주제문 중 일부 인용

당시 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기본소득은 청소년을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점, 청소년에게 경제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가정과 사회에 종속되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 집 밖이나 학교 바깥을 선택한 청소년은 갈 곳이 없다. 내게는 ‘부모의 폭력이 싫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등 각자의 이유로 울타리를 나온 청소년 동료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롯한 삶의 안전망이었다. 나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청소년에게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을 동등하고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했다.

세션의 다른 발표자들도 여성에게, 노동자에게, 청년에게,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각각 발표했다. 맥락은 달랐지만, 기본소득이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되짚어볼 수 있는 세션이었다. 반대로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권이 강화되어야지만 기본소득 역시 제 의미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두발자유 등 청소년의 자유권에 대한 운동은 유서 깊었지만, 기본소득을 비롯한 청소년의 사회권을 주장하는 운동은 생소할 때였다. 세션에서 현장 참가자들과 함께한 이야기는 나에게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넣었다.

나와 동료들은 그렇게 기본소득당의 창당에 함께했고, 기본소득당 내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친권자, 교사 등 어른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왜 중요한지를 돌아봤다. 청소년이 획일적인 진로만을 강요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했다. 대덕구 용돈수당, 판동초 기본소득 등 몇 년 새 우리 사회에서 시도된 기본소득 사례들을 직접 검토해보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사례를 돌아보며, 기본소득이 제도화될 때 청소년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방안 역시 검토했다.

고민과 상상력을 나눴던 시간들이 모여서, 청소년 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사례가 되고 한 정당의 정책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쌓인 것이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학술적 탐구를 넘어, 실천을 고민하고 운동을 확장시키는 장이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7년만에 23개국서 49개국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막연한 고민을 털어놓던 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기본소득 정치인으로서 발표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모인 고민이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실천과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열린다. 기본소득을 막연히 알고만 있는 청년 동료들에게 ‘학술대회’에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책 속에 갇혀 있는 ‘딱딱한 말’이 아니라, 현실 속의 경험과 실천, 토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소개하고 싶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서툴지만 새롭고, 낯설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모여드는 대회가 될 것이다.

제22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주된 세션 주제는 ▲정치 속의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책·실험·입법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의 등이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토론과 논의가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기본소득 운동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범람하며,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BasicIncome Issue 2.

[기획자의 말]

이번 기획은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독 학술교류 온라인 컨퍼런스”를 지상紙上으로 옮긴 것이다. 지상으로 옮기면서 일부 수정이 있었다.(안효상, 이건민의 글)

‘기후’에 위기crisis, 재앙disaster 등의 말이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따라붙게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연합뉴스 등은 올 7월 초 세계평균기온이 10만 년 혹은 12만 년만의 최악의 폭염일 것이라는 영국 기상청 소속 과학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과 관련하여 기후‘정의’climate justice가 가장 큰 이슈의 하나로 등장한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자 간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의식”(양화인, 2022)이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 문제다.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구인은 궁극적으로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지만, 위기의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다.”(그린피스)

이런 현실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가장 책임이 적은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부터 구해져야 한다.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대책 중 하나이다.

기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작년 대선 이후 다소 냉랭해진 것이 사실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를 통해 기후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전기가 마련되길 소망한다.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 이 글은 2023년 5월 6일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 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에서 발표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장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림으로써 더 나은 삶
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시점(2023년 7월 3일)에 지구가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과학적 증거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이면 국제지질학총회를 통해 인류가 새로운 지질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지구 역사에서 커다란 변화를 목격하고 인식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다양한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해 이른바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해 왔지만, 그럴수록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하에서) 자연의 한계에 봉착해 왔다. 인류세는 이런 자연의 한계라는 점에서 어떤 질적 차이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증유의 사태이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시간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혁신이 요구된다면 아마 지금이 가장 그럴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인류세라는 개념이 던지는 문제

인류세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 인류가 커다란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

해서 지구 생태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질시대를 말한다. 지구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 및 장기적인 지속을 구분하는 지질시대에 인류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인류는 극단의 프로메테우스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류세는 도리어 인류 문명의 가능조건이자 배경으로서의 환경의 붕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명칭이다.

새로운 지질시대로서의 인류세에 직면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홀로세Holocene 시기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후가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행성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보여주고 있다. 대기권 오존 고갈, 생물권의 온전함의 상실, 화학적 오염과 새로운 물질의 방출, 대양 산성화, 담수 소비 및 지구적 수자원 순환의 문제, 토지 체제의 변화, 질소와 인의 배출, 대기 에어로졸 부하 그리고 기후 변화.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은 환경 붕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자연사가 특유하게 안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이런 시기가 끝났다는 것.

인류세 초기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를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 구분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인간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대와 다르게 훨씬 길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인류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간 범위는 훨씬 짧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나쁜 의미에서 관조적인 태도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류세 초기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류세 초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환경 붕괴를 목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긴 했지만(비록 홀로세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붕괴의 경향을 완화해서 거주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거주가능한 지구 환경이 일정 시기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이기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말해준다.

“인간의 웰빙 및 지구의 건강함에 위협”이 되는 기후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출되어 있다. 지구 대기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1차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 가운데 일부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이라는 과제가 도출된다. 이때 완화와 적응은 기존의 사

회 체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새로운 기후 체제(climate regime)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 1.5도씨 이하라는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사실 이런 목표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지만, 더 문제는 이를 위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사 빠른 시일 내에 1.5도씨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기후 재난과 생태계 파괴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체제가 이러한 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만 완화와 적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화와 적응 자체가 인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기후 정의라는 문제들

기후 정의라는 요구 혹은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가 인류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 자체가 불평등에 기초해서 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 체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세 초기의 기후 재난과 환경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재난에 미리 대처하는 것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에서도 가장 힘든 처지에 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먼저 산업 자본주의를 이룬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상류층이 가장 큰 책임을 중산층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류층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환경 위험을 전가했다.

이런 역사적, 현재적 책임 및 부담의 전가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한한 이윤 추구 및 자본 축적을 위해 자연 자원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수탈과 착취를 자기 논리로 하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현재의 기후 위기와 환경 붕괴를 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에 대한 주류적인 대처 방안, 즉 기술주의적, 관료주의적, 성장주의적 방식은 ‘체제 전환’의 대가를 다시금 취약한 사람들과 자연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강자에게 건 도박’).

또한 이런 주류적 대처 방식은 여전히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및 환경 붕괴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으며, 기술주의적 대처 방안은 우리 모두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빠뜨릴 가능성이 크고, 관료주의적 방식이기에 인류 공동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 체제 내에서의 생태적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을 통한 생태적 전환 혹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일 것이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

오늘날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경고이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가리킨다.

전환이라는 말이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건 근본적 체제 변화를 가리키건 전환이라는 말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특히 기후 변화의 원인 및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 2) 생태적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더 심오한 변화가 필요하다.
- 3) 생태적 위기는 다중적 위기 혹은 여러 사회적 위기의 일부이며, 따라서 복합적인 방식 혹은 전환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 4) 이 위기는 전 지구적이며, 따라서 인류 문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환의 과정과 목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 상의 사회적 삶의 생물리적 조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존엄, 자유, 정의,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생태적 체제의 구성.

이러한 전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낳은 모든 관계의 변화를 기초로 하며, 또 이를 목표로 한다. 기존의 추출적, 산업적, 금융적 자본주의가 착취와 수탈, 억압과 지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 사이의 평등, 공존, 연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관계의 원칙일 것이다.

기본소득의 함의와 전략

모두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장을 하는 기본소득은 존엄과 자유와 참여의 보장 그리고 불평등의 완화를 겨냥한다.

기본소득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배 체계와는 다른 공유부의 배당이라는 새로운 분배 체제의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시하건, 기존 부의 재분배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건 사회적 부의(재)분배가 크게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경제 체제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힘의 강화^{empowerment} 혹은 자율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질적 자유의 증대라고 말하건 비지배 자유의 보장이라고 말하건 이것이 겨냥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착취와 억압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체제를 지향하도록 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의 도입은 경제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재원이 공유부에서 나오건 기존 부의 재분배로부터 나오건 기본소득의 도입은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추출적 자본주의를 제약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경제 활동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삶을 꾸려가는 것 livelihood이 될 것이다. 경제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될 경우, 인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이 현실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거에서 다른 정책 혹은 전반적인 체제 전환의 노력과 기본소득이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다른 제도적 배치 및 사회적 지향이 없을 경우 기본소득의 실시가 (혹은 예를 들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이)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환의 시급성이다. 지금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시급성은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하면서도 전반적인 조율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종의 정책 믹스 policy mix 혹은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적 전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
안 소장

1. 생태적 전환과 불평등 완화

1.1. 탄소배출량이 많은 경제는 성장에 불리하다는 점은 IMF나 World Bank도 말한다. 이러한 진단은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탈탄소기술의 시장형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탄소중립 문제가 성장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멸망이나 지속인가 문제라는 점이다.

1.2. 적어도 10년 전부터 OECD와 IMF는 소득이 불평등한 경제보다 더 평등한 경제가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평등과 생태적 전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성장이 아니라 성장 감소의 가능성이다. 소득이 평등하면 할수록 탈성장을 감당할 여지가 있다. 생태적 전환은 불평등의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생태적 전환이 탈성장을 의미하든 다른 방식의 성장을 의미하든,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불평등의 완화는 필수 조건이다.

1.3. 신자유주의는 중산층을 몰락시켰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위소득의 차이가 미미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혁명과 자동화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시킬 것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복지제도만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

1.4.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기본소득은 전체 소득 구간의 격차를 줄인다. 예를 들어 t%의 비례세를 도입하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지니계수는 t%만큼 줄어든다. 누진세의 경우 지니계수 개선 정도는 더 커진다. 민간소유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소유를 늘리며 공공소유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경우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조합과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2.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이다. 탄소기초가격을 정하는 탄소세와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바꾸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시장확산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가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되었다. 이는 전환적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2. 탄소세는 민간의 탈탄소 혁신에 기대하는 정책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반면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는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공공투자 정책의 문제점은 혜택을 사기업들이 독차지한다는 점이다. 만약 공공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며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면 공공투자는 자산소유 전체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3. 탄소세와 탄소배당

3.1.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세금이며, CO₂ 환산 톤 당 일정액을 과세한다. 탄소세는 유럽대륙의 16개 국과 캐나다에 도입되어 있다. 탄소세는 탄소기초가격을 결정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생산품들은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탄소세의 문제점은 세금이 최종소비가격에 전가되고 물가가 올라가며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탄소세는 역진적이다.

3.2. 탄소세의 수입을 탄소배당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되돌려준다면, 탄소세가 도입되더라도 구매력의 약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세율을 사회적 저항 없이 인상할 수 있다. 세율의 인상은 기업들의 탈탄소 경쟁을 촉진한다.

3.3. 탄소세 도입과 탈탄소 기술의 보편화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소배당은 탄소세는 도입되었으나 탈탄소 기술은 아직 채 보편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탄소배당은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세율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연동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간 탈탄소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탄소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다. 스위스는 탄소세수의 2/3를 배당하며 캐나다는 90%를 배당한다.

4.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와 사회구성원의 공유지분

4.1. 탄소세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의 탈탄소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으로 탄소중립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에는 205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른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요청된다. 유럽과 미국은 이 점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녹색자본주의로 바꿀 수 있지만 사적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은 완화되지 않거나 더 커질 수도 있다.

4.2. 장차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탈탄소 기술에 공공투자를 제공하고 지분을 획득하여 그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5. 총정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조합

에너지 전환을 위해 두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 하나는 탄소배당과 결합된 탄소세 도입이다. 세율은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에 연동하여 전년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인상한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이며, 공공투자 지분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Das Grundeinkommen als Instrument de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사회·생태적 전환의 도구로서 기본소득

Dagmar Paternoga 다그마 파터노가 독일 Attac¹⁾, “모두에게 충분한” 연구모임²⁾

번역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장

Liebe Teilnehmende an unserem deutsch-koreanischen
Seminar,

사랑하는 한-독 세미나 참가자에게

für uns von der AG Genug für alle von Attac Deutschland geht es bei eine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nicht nur um einen individuellen Geldbetrag, sondern es geht auch ganz allgemein um Teilhabe am sozialen Leben, an der Gesellschaft. Dafür brauchen Menschen nicht nur Geld, das auch, klar, sondern auch sozialer Infrastruktur wie Bildung, Betreuung, Gesundheitsversorgung, Wasser, Energie, Mobilität, Kommunikation, Wohnen und noch mehr als das. Damit der ökologische Umbau der Gesellschaft ohne Existenzangst erfolgen kann, müssen die Menschen das Gefühl haben, dass sie sozial abgesichert und persönlich wertgeschätzt sind. Darüber hinaus ist öffentliche Infrastruktur auch ökologisch,

1) 금융과세시민연합(Association for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for Citizens' Action)

2) “모두에게 충분한” 연구모임 “모두에게 충분한”은 “genug für alle”의 번역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은 모두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요롭다”는 의미이다. 즉 “모두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인데 왜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나, 혹은 어떻게 해야 모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를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sozial und ökonomisch günstiger als Marktlösungen. Die Umverteilung von Geld weg von Finanzinvestitionen hin zu Konsum vermindert schädliche Wirkungen, weil damit ein Teil der Finanzen, die ansonsten in klimaschädliche Projekte investiert werden, dafür verloren ist.

독일 Attac의 모두에게 충분한 연구모임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개인에 대한 금전지급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공동체 전반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교육, 돌봄, 건강관리, 물, 에너지, 이동성, 통신, 주택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다. 생계 불안(실존적 두려움) 없이 사회의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안전하며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공공인프라가 시장해법(Marktlösungen; market-solution)보다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금융투자에 쓰일 돈을 소비로 재분배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후에 해가 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되었을 자금의 일부를 소진시킴으로써 유해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Für heute möchte ich mich mit dem Thema Energie beschäftigen, auch weil es in Deutschland große Aufregungen gibt, weil die deutsche Regierung beschlossen hatte, wegen des Ukrainekrieges kein Gas mehr von Russland abzunehmen. Also versuchte man, dieses Riesenloch schnell zu stopfen und reiste in der Welt umher, um Gas, auch Fracking Gas, zu erwerben. Es wurden für deutsche Verhältnisse in kürzester Zeit mehrere LNG-Terminals gebaut für die Versorgung mit Gas. Attac und die deutsche Umweltbewegung läuft zwar Sturm dagegen, aber man sitzt das einfach aus.

오늘 나는 에너지를 주제로 다루려 한다. 독일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가스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독일이 큰 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 큰 구멍을 신속히 메우고자, 파쇄(프래킹; Fracking) 가스를 포함한 가스를 얻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 다녔다. 독일 기준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스 공급을 위한, 더 많은 LNG 터미널이 건설된다. Attac과 독일환경운동은 이에 반대하지만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Ehe ich darauf näher eingehe, werde ich skizzieren, vor welchen sozial- ökologischen Herausforderungen die Menschheit steht.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나는 인류가 직면한 사회-생태적 도전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Die Erde steht vor dem Kollaps, wir rasen mit zunehmender Geschwindigkeit auf die Klimakatastrophe zu; Wissenschaftler*innen warnen seit vielen Jahren und was geschieht? So gut wie nichts.

지구는 붕괴 직전에 있고 기후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수 년 동안 경고해 왔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tattdessen steigt der CO2 Wert weiter an. Und im sozialen Bereich, gibt es wenigstens auf diesem Gebiet Fortschritte? Nein, die Zahl der Hungernden nimmt weltweit weiter zu und die Armen hier bei uns in Deutschland wissen aufgrund der Energiepreissteigerung und Inflation nicht, ob sie essen oder heizen sollen in diesem Winter. Das Geld reicht für viele nicht bis zum Ende des Monats aus.

오히려 CO2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사회 영역에서는 진전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 독일에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 겨울에 끼니를 채울 수 있을지, 난방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처지다. 많은 이들이 월말까지 쓸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없다.

Erderwärmung, Verlust der biologischen Vielfalt, Ressourcenknappheit, soziale Ungleichheit – die Menschheit steht vor großen Herausforderungen. Die Idee, über wirtschaftliches Wachstum Armut zu reduzieren und den Ressourcenverbrauch über technologische Innovationen und ökologische Modernisierung zu senken, gilt in weiten Teilen der Ökologie- und wachstumskritischen Bewegungen als gescheitert. Das haben wir vor langer Zeit bereits analysiert. Jetzt schließen sich dem immer mehr Aktivist*innen an.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 손실, 자원 부족, 사회적 불평등 등 인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을 줄이고 기술 혁신과 생태적 현대화를 통해 자원 소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생태운동과 성장비판적인 운동에서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이를 분석한 바 있다. 지금은 점점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Die Hoffnungen, die viele in die seit einem Jahr in Deutschland regierende Koalitionsregierung gesetzt hatten, vor allem auf die Grünen, wird enttäuscht. Das Problem dieser Regierung besteht darin, dass sie rückwärtsgewandte Konzepte angesichts der Energiekrise anwendet und auf Fracking-Gas setzt und an einer Energieversorgung über lange Lieferketten und globale Ausbeutungsverhältnisse festhält.

독일에서 1년 동안 집권한 연립 정부, 특히 녹색당에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깨지고 있다. 이 정부의 문제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후진적인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파쇄 가스에 의존하고 긴 공급사슬과 글로벌 착취 관계를 통한 에너지 공급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Vorwärtsgewandt wäre, nun die lange verschleppte und verhinderte Energiewende endlich und schnellstens auf den Weg zu bringen. Wieso sind die im Jahre 2022 geführten Diskussionen identisch mit den rückwärtsgewandten Energiedebatten der letzten 25



Jahre? Es geht und ging ausschließlich und immer um Technologien der Vergangenheit – von Atomkraft, Flüssiggas bis zur Kohle – und es stellt sich die Frage: Wenn innerhalb von vier Monaten LNG-Terminals gebaut werden können, wieso bauen wir nicht ebenso schnell Windräder und Stromtrassen? Wieso diskutieren wir nicht über Energiespeicher, dezentrale Netzinfrastruktur und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der Stadtwerke und Energienetze?

미래지향적이려면 오랫동안 지연되고 막혀 있던 에너지 전환을 당장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2022년 진행된 논의는 지난 25년간의 후진적인 에너지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원자력, 액화천연가스부터 석탄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기술만을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해 왔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LNG 터미널을 4개월 내에 건설할 수 있다면 풍력 터빈과 송전선을 그만큼 신속하게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쩌서 에너지 저장소, 분산형 전력망(그리드) 인프라, 공공유틸리티 및 에너지망의 재공영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가?

Geen Energiearmut hilft eine öffentlich finanzierte Grundversorgung Energie, das hat unsere Arbeitsgruppe Genug für alle bereits vor 15 Jahren gefordert und fordern heute Attac Deutschland und viele andere Umweltschutzverbände.

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본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 빈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15년 전 우리 워킹그룹(연구모임)인 Enough for All(Genug für alle)이 요구한 사항이자 오늘날 독일 Attac과 다른 많은 환경 보호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Ich möchte hier insbesondere auf die neueste Studie für den Club of Rome „Earth4all“ „Ein Survivalguide für unseren Planeten“ hinweisen und dass darin bezüglich einer sozial-ökologischen Transformation ähnliche Vorschläge gemacht werden wie sie die Grundeinkommens- und die Degrowthbewegung seit vielen Jahren immer wieder fordern.

나는 여기서 특별히 로마 클럽의 최신 연구인 “Earth4all” 즉 “지구의 존속을 위한 가이드”를 언급하고 싶은데, 이 연구에는 기본소득운동과 탈 성장 운동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과 유사한 사회-생태적 전환에 관한 제안이 담겨있다.

In der Studie wird vor einem Weiter-so gewarnt, einer Politik der zu wenigen und zu späten Schritte. Und sie verweisen darauf, dass nur noch ein Riesensprung helfen kann, den Klimakollaps zu verhindern, die Menschheit muss sich ernsthaft und schnell vom gegenwärtigen Kurs abwenden und bis 2050 den Weg in eine nachhaltige Welt einschlagen.

이 연구는 너무도 적고 너무도 늦은 조치라 할 “현상유지(Weiter-so; keep it up)” 정책에 대해 경고한다. 또한 거대한 도약만이 기후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류는 2050년까지 현재의 경로에서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Sie untergliedern ihren Bericht für den „Club of Rome“ in fünf Kehrtwenden für den

Survivalguide, zu denen ich nicht einzeln Bezug nehme. Ich verweise lediglich darauf, dass sie zum Thema Ungleichheit unter anderem eine allgemeine Grunddividende fordern. Das kommt einem Grundeinkommen sehr nahe.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는 존속을 위한 가이드를 다섯 가지 전환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다만 불평등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기본배당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언급해둔다. 이는 기본소득에 매우 가깝다.

Zum Thema Energie fordern sie eine Transformation der Energiesysteme, um den Ausstoß von Treibhausgasen alle zehn Jahre zu halbieren und saubere Energie allen zur Verfügung zu stellen. Das wird auch Energiesicherheit bringen.

또 다른 주제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10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또한 에너지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Die Verbrennung fossiler Rohstoffe und die Atomenergie schaden nicht nur der Umwelt und belasten bei Atomkraftwerken die Menschheit über Jahrtausende, ein sicheres Endlager ist weltweit immer noch nicht gefunden, in Deutschland nicht einmal ein unsicheres.

화석 원료와 원자력을 태우는 것은 환경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는 인류에게 수천 년 이상 부담을 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최종 저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으며 독일에는 안전하지 않은 저장소조차 없는 실정이다.

Die Energieversorgung hat in Deutschland den größten Wasserbedarf. Die entnommene Wassermenge wird fast ausschließlich (zu 98,8 %) für Kühlzwecke eingesetzt. Sie benötigen sehr viel Wasser, allein die Tagebaue verbrauchen 12,7 Milliarden Kubikmeter Wasser pro Jahr. Bei den Tagebauen kommt es außerdem zu bergbaubedingten Grundwasserabsenkungen, und wenn der Klimawandel und damit Dürren weiter voranschreiten, wird das Wasser in den Flüssen zur Kühlung der Atomkraftwerke nicht mehr ausreichen wie letzten Sommer und in diesem Frühjahr in Frankreich. Daraufhin mussten dort Atomkraftwerke abgeschaltet werden und Frankreich bezog Strom unter anderem aus Deutschland.

독일에서 물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 공급 분야이다. 취수되는 물의 대부분은 거의 전적으로(98.8%) 냉각 목적으로 사용된다. 노천 광산에서만 연간 127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소비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또한 노천 광산은 채굴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기후 변화와 가뭄이 계속되면 작년 여름과 올봄 프랑스에서 발생한 것처럼 강물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냉각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프랑스는 독일 등에서 전

기를 끌어와야 했다.

Auch nach Einschätzung der Weltwetterorganisation (WMO) bedroht der Klimawandel die Energieproduktion weltweit. Hitzewellen und Trockenheit lassen etwa Wasserpegel sinken, die für Wasserkraft oder zur Kühlung von Atomkraftwerken gebraucht werden, wie die WMO in Genf warnte. Dazu gefährden Stürme und andere Wetterextreme vielerorts die Infrastruktur.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 냉각에 필요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제네바의 WMO가 경고한 바 있다. 또한 폭풍과 기타 기상이변으로 인해 여러 지역의 인프라가 위협에 처해 있다.

Der Energiesektor sei für drei Viertel der menschengemachten Treibhausgasemissionen verantwortlich, die den Klimawandel vorantreiben. Es sei deshalb unumgänglich, die Produktion radikal umzustellen. Doch die Regierungen täten zu wenig, sagte WMO-Generalsekretär Petteri Taalas. Sie schafften es nicht, die Klimaerwärmung wie angestrebt auf 1,5 Grad zu begrenzen, wenn die Stromproduktion aus sauberen Quellen nicht in den nächsten acht Jahren verdoppelt wird.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온다. 따라서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너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향후 8년 동안 청정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를 목표치인 1.5도로 제한하는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Um das 1,5 Grad-Ziel zu erreichen, strebt die Weltgemeinschaft eigentlich an, bis 2050 nur noch so viele Kohlendioxid-Emissionen zu verursachen, wie kompensiert werden können (Netto-Null-Emissionen). Demgegenüber betont die WMO, dass bei weitem nicht genug getan werde. Die zur Erreichung des Ziels nötigen Emissionsreduzierungen bis 2030 würden nach derzeitigen Plänen nur zu 30 Prozent geschafft.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실제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순 배출량 제로)을 상쇄 가능한 정도로 묶어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WMO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30%만 달성할 수 있다.

Tatsächlich müsse der Strombedarf bis 2050 weitgehend aus erneuerbaren Energien, vor allem Solarenergie, gedeckt werden, schreibt die WMO. Das reduziere auch den Stress durch wachsende Wasserknappheit, denn Strom aus Solar- und Windenergie brauche deutlich weniger Wasser als etwa Strom aus Anlagen, die mit fossiler Energie betrieben

werden oder aus Atomkraftwerken.

WMO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2050년까지 전력 수요는 대부분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화석 연료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훨씬 적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Aber tatsächlich werde sich das Problem noch verschlimmern.

그러나 사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Schon heute stünden 15 Prozent der weltweiten Atomkraftwerke in Regionen, in denen das Wasser knapper wird. Der Anteil steige in den kommenden 20 Jahren wohl auf 25 Prozent. Auch 33 Prozent der Wärmekraftwerke, die Kühlwasser brauchten, und elf Prozent der Wasserkraftkapazität seien in Gebieten mit Wasserstress. Gut ein Viertel der existierenden Staudämme für Wasserkraftwerke und knapp ein Viertel der geplanten Anlagen seien an Flüssen mit mittlerem bis großem Risiko von Wasserknappheit.

오늘날 이미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15%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비율은 향후 20년 내에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냉각수가 필요한 화력발전소의 33%와 수력 발전 용량의 11%가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한다. 기존 수력 발전 댐의 4분의 1과 계획 중인 발전소의 거의 4분의 1이 물 부족 위험이 중간 이상인 강에 있다고 한다.

Damit die Menschen aufgrund der Herausforderungen für die sozial-ökologische Transformation, die auch zum Abbau von Arbeitsplätzen oder zum Umbau von Arbeitsplätzen führen wird, keine Existenzangst haben müssen, wäre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zwar global, dringend erforderlich und wie oben im Text bereits betont ist die Einführung von kostenlosen Grundkontingenten für Energie unverzichtbar, damit wir alle Menschen beim der Transformation in eine sozial-ökologische Gesellschaft mitnehmen können.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의 개편으로 이어질 사회-생태적 전환의 도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생계불안(실존적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 글 뒷부분에서 이미 강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에 대한 무상 기본할당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Danke für Ihre Aufmerksamkeit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탄소배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생태적 전환의 도구로서 기본소득”

이건민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

다그마 파터노가의 발표문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 소득의 도입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경제 성장, 기술 진보, 생태적 근대화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울러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계속해서 의존해도 된다는 생각이 인류의 미래에 재앙적이라는 것,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사회·생태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기본소득 Grundeinkommen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힌 보편적 기본배당allgemeine Grunddividende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전 지구적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본소득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한 보충 설명을 요청드린다.

다음으로 준비한 토론은 탄소배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하는 작업과 관련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토론자에게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는 것, 소득분포가 더 평등해지고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는 것,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는 기본소득의 자원 조달 방식에 따라 그 크기 면에서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재원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그 방향 면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탄소세와 탄소배당을 결합한 정책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람들은 탄소세와 탄소배당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탄소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배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기제로서 탄소배당을 바라보면서 탄소배당을 비판한다. 둘째, 탄소세가 내세우는 정책목표를 고려해보았을 때 탄소세수 중 전부 혹은 적어도 일부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활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당위론적 입장에서의 반론이 존재한다. 셋째, 화폐적 효용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기술 개발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가 낳는 비화폐적 효용, 예컨대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토양, 쾌적한 환경 등이 가져오는 양陽의 효용까지 고려될 경우, 탄소세수 중 탄소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탄소세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탄소세의 역진성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의 반론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반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관한 프레이밍,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의 논증 구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의식, 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당 정책에 관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에 관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실제로 개인이나 가구가 이러한 계산에서 화폐적인 측면과 더불어 비화폐적인 측면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지, 만약 고려한다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에 포함하는지, 탄소세수 중 탄소배당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와 파괴는 지배적인 생산 및 생활방식에 기인합니다. 현존하는 생산 및 생활방식에 의해 자연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단순한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존재 기반이 파괴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사회, 지역, 국가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들이 전 지구를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환경에서의 삶을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연적 부의 정당하고 적절한 몫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진정한 노선 변경이 없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생태적 영향과 기후 변화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반구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사회변화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사회적 전환이란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 및 생활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세계와 사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의 결과는 오염원에게 부담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세계와 사회를 설계하는 것은 사회-생태적 전환에서의 정언명령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는 동전의 양면이며 두 가지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가치변화가 요구됩니다

생태적으로 재앙적인 생산과 이에 기반한 소비의 원인 중 하나는 맹목적인, 궁극적으로 이윤과 수익 지향의 성장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천연자원 사용과 자연 파괴를 통해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배적 정치의 서사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파괴는 인간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가난한 국가에 대한 부유한 국가의 경제적 착취와 억압, 기업 및 주주에 의한 착취와 억압과 함께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은 근본적인 생태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후 변화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재화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가치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로마클럽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생태적 전환이란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회와 자연의 부에 대한 사회적으로 정당한 몫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사회생태적 전환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부와 자연적 부의 정당하고 적절한 몫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로마클럽의 최신 보고서를 제출한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이러한 보장의 한 형태로 봅니다. 우리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상류층에서 중하위층으로 소득과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를 수반하게 됩니다. 유럽의 238명의 학자들이 공개 서한에서 밝혔듯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과 부를 더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비생태적인 생산 및 소비에 과세하거나 탄소배출로 인해 기후에 해를 끼치는 생산과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수입은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되돌아갑니다. 이는 기후를 파괴하는 생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부를 위에서 아래로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반생태적으로 소비

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높은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 소유자가 되는 방식으로 공공 재정을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에 커다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공동 소유자가 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한 생산과 서비스의 민주적 설계가 촉진될 것입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수립하려면 부유한 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재)분배해야 하며,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큰 효과를 보려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존과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의와 개인들의 생계노동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태적으로 재앙적인 생산과 소비로부터의 단절, 반드시 필요한 단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방식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때에만,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약화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때에만, 모든 사람이 사회생태적 전환에 넓은 범위에서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곤궁을 면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존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개인의 경제적 필요를 넘어 충분한 여가 시간이 필요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 사회적 활동, 돌봄 활동, 문화적·예술적·정치적 활동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태적 전환이란 생태적으로 비참한 생산주의와 개인 소비주의를 넘어서는 사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 조합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정책조합에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공공 선을 지향하는 경제의 구축, 빈곤국 부채의 탕감,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무역 및 금융관계,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공적인 사회인프라와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여성해방, 여성 권리의 강화, 성평등한 노동분업,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의 민주화 등도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기후변화의 억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이 모든 점으로부터 기본소득 운동이 생태주의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그리고 그 밖의 사회운동과 함께 뭉쳐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지구에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지배적인 경제 모델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불안정해집니다.
바야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https://www.earth4all.life/>)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입니다!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의 성립 배경

선언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기반입니다>는 2023년 5월 6일 (토) 한국시간 17-21시에 열린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 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의 제2부 종합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컨퍼런스는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Deutschland, AG genug für alle, 한국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Netzwerk Grundeinkommen Deutschland,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배당과 공유지분권 모델”,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의 다그마 파터노가Dagmar Paternoga가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도구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고 미아 스메탄(Mia Smettan, 새로운 경제를 위한 연구작업실), 로날드 블라슈케(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이견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논평을 맡았다.

제2부는 베르너 레츠(Werner Rätz,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의 사회로 종합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의 결과는 로날드 블라슈케Ronald Blaschke와 금민Min Geum에 의하여 비망록Memorandum의 형태로 정리되었고 컨퍼런스 참여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4개 주최단체 회원들, 관심 있는 다수의 회람을 거쳐 현재의 선언으로 완성되었다.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과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는 회의를 거쳐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지지를 표명했다. 선언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네트워크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 선언은 5월 6일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주최한 4개 단체를 포함하여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지지 서명을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공유지론에 기본소득론을 더해야 하는 이유*

* 이 글의 일부는 논문 「서정희·이지수·안효상·조광자·한인정(2023).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에서 가져옴.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1. 기본소득과 공유지

계간 기본소득의 '논점' 코너의 주제는 제13호(2022년 가을호)부터 공유지이다(제14호에서 이 계절의 이슈에서 다루어졌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9년 1월 총회에서 기본소득의 정의에 공유부를 포함시켰다.¹⁾ 공유부는 기본소득운동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공유부를 모두의 부라고 할 때, 그 부의 원천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이론은 공유지론이다. 공유지와 기본소득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시기에 비판적 대안으로서 거의 동시에 부상했다. 그러나 두 대안은 별도로 등장했고, 각각 진전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의 무조건적, 개별적 분배이고, 공유지는 공동자원에 대한 공유자의 접근권과 용익권을 보장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둘은 다른 지반 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나 공유지 모두 공동의 것the common을 가정한다.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없이 진전되어 온 두 이론은 서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유지 이론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이론이 접합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2. 공유지 이론의 갈래

공유지 이론은 크게 두 흐름이 나란히 존재한다. 하나는 오스트롬으로 대표되는 공동자원관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화를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는 비판이론 계열의 공유지론이다.

공유지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킨 하나의 주요 계기는 오스트롬 등의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적 연구였다. 오스트롬(2010[1990])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공동자원 혹은 공유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서 공유지가 사유재나 공공재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2019. 1. 26.]

있는지를 밝혀냈다. 이런 결론은 게릿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 등장하는 공유지가 실제로는 공유지가 아닌 개방 접근open access 자원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롬의 공동 자원 관리론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오스트롬은 사회적 관계와 제도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식별 가능한, 따라서 대체로 소규모의 공유지 혹은 자연 자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것이 유지·관리되는 방식에 집중한다. 전통적 공유지 개념에 기댈으로써 지식 공유지나 도시 공유지 같은 새로운 공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스트롬은 공유지를 둘러싼 공동체 내부의 역학에 집중함으로써 공유지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 예컨대 권력 및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지를 사고하지 못한다(정영신, 2016; 볼리어, 2015).

공유지가 주요한 사회적 대안으로 부상한 데에는 공유화를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는 공유지론이 있다.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공유지 개념은 크게 확장된다. 이 시기에 국가와 자본은 구조 조정과 탈규제라는 슬로건 하에 물·과 같이 이전에는 주로 공공이 제공하거나 공공재로 이용하던 것을 대규모로 민영화하거나 상품화한다. 이에 대해 대안적 사회운동 세력은 공유지를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의 준거로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공유지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민영화나 상품화의 대상이 되거나(Foster and Swiney, 2021), 도둑질당하거나 파괴되는 어떤 것(라인보우, 2012; 2021)을 가리키게 되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공유지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정치경제학 비판과 정치생태학에 기초해서 행동 혹은 실천(공유화)을 중심으로 공유지를 이해한다. 정치적, 이념적 경향에 따라 공유지의 위치와 지향이 다

르긴 하지만 이들은 공유지를 자원이나 외적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유화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와 공동체라는 세 기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생태 체제(De Angelis, 2017) 혹은 패러다임(볼리어, 2015)으로 본다.

자원이 아니라 공유화가 공유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유지의 위치 및 전망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유지의 재발견이 ‘새로운 인클로저’를 통해 일어났지만 인클로저라는 개념은 현재의 공유지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클로저는 이미 있는 공유지를 국가와 자본이 포획하고 수탈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원적 축적’ 이후에도 공유지가 끊임 없이 생겨나고 재생산되고, 다시 수탈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 Nayak and Berkes(2011)는 공유화commonization와 탈공유화decommonization라는 동적 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은 인도의 킬리카 석호Chilika Lagoon에 대한 사례 연구 속에서 이 개념을 고안하였다. 흔히 전통적 공유지는 ‘태곳적부터’ 내려온다고 간주되어 왔는데, 실제로 킬리카 석호가 공유지가 된 것은 18세기 초였다. 그러다 20세기 후반 새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자본이 들어와 새우 양식업을 하게 되면서 공유지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공유화/탈공유화는 어떤 것이 공유지가 되거나 더이상 공유지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3. 공유지 이론에서 기본소득 이론이 필요한 이유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이나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이나 모두 공유지를 토대로 화폐적 형태의 부가 생겼을 경우 이를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즉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으로 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때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이란 공유지에 공유부가 생겼을 때, 특히 현대의 화폐-시장 경제에서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가 생겼을 때 공유지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유지 원칙이란 공유부란 집단적 부이며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정한 몫을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대 간 공평(하트워 규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스탠딩, 2021).

공유지 혹은 공동자원을 집단적 관리와 개별적 이용의 대상인 자원으로 보는 오스트롬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공유부에 대한 분배 방식이 공유지 논의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수자원이나 목초지의 경우에는 개별적 이용 자체가 분배이며, 어장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자기 노동을 투하해서 얻은 수확물은 자기 것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도 공유지를 새로운 사회생태적 체제로 이해함으로써 공유지 및 공유화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공유하고 이용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공유지 이론에서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을 다루지 않는 것은 중대한 누락이다. 공유지가 자연적 유산, 역사적 관습, 공동의 부 등을 기초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생긴 부에 대해서도 근대 사회 특유의 분배 방식, 즉 노동-소유에 입각한 분배 이외에 다른 방식의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 공유지를 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 및 실천인 공유화를 중심으로 공유지를 파악할 때는 더

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공유화는 공유자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그런 주체성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재생산한다고 할 때 분배도 이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유지에서의 분배가 ‘공동의 이용’이라는 말로 간단히 치환될 수 있었겠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공유지에서는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기 보다는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공유지에서의 분배는 공유지의 형성·유지·(재)생산 그리고 공유지 체제의 확산을 위해 모든 공유자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그들의 공유지 감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공유화(commoning)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을 고민하는 작업은 공유화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은 무엇일 수 있고, 무엇이어서야 하는가?

공유지 이론가들은 일차적으로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부’^{wealth}의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공유지는 그 자체로 본래의 가치로서의 부를 내포하거나 공유지의 이용을 통한 상품화되지 않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숲, 신선한 공기, 생태적 환경, 상품화되지 않은 식수, 관개용수 등 수없이 많다. 공유지를 구성하는 공유재(공동자원)가 무형의 혹은 비화폐적 형태의 부를 창조하는 경우 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공유화가 중요하다.

동시에 공유지는 그 활용이나 이용을 통해 상품화되거나 화폐로 환원되는 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장고도나 제주도의 바다숲의 생선, 해삼, 멍게 등을 팔아서 생긴 수입, 풍력 발전을 통한 전기 판매로 들어온 수입 등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만들어진 부, 즉 화폐로 전환된 부이다. 어떤 자원을 통해 화폐적 형태의 부가 발생했을

때 그 부를 분배하는 방식은 소수에게 분배하거나 모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소수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그 자원의 법적 소유자에게 한정하거나, 기여 유무와 정도를 계산하여 분배하거나, 빈곤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을 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와 다른 방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공유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사회생태 체제(De Angelis, 2017)라고 할 때 분배 방식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에 준거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은 앞서 말한 근대적 분배 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분배 형태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공유부에 근거해서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인 모두의 몫을 분배하자는 기본소득론이 정당성과 원천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서정희·안효상, 2021).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 또는 생태환경은 현재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인류 모두의 것으로서 자연적 공유부이며, 어느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고 사회적 효과 속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회적 공유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공유부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금민, 2020;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부와 공유지는 인클로저, 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정부의 여러 정책 등을 통해 일부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공유지의 상업적 이용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공유부의 포획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모두에게 환원해야 한다. 이것이 공유지 기금 및 배당 제안이다(스탠딩, 2021; Standing, 2022).

4.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방식은 중요한 공유화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유부를 배당하는 방식은 주요한 공유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는 공유지가 모두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일이 됨으로써 공유지를 강화한다. 이는 공동성의 감각을 경험하고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유화가 현재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개별화된 경제인 homo economicus에 맞서는 대항 헤게모니 실천을 통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공유지 수익의 배당을 통한 공동성의 경험과 실천은 공유지를 강화하는 환류 효과를 낳을 것이다.

공유지 수익의 분배를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배당은 그동안 공유지 이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방식의 중요한 공유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강조되어 온 공유지를 인식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서의 공유화뿐만 아니라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가 생겼을 때 이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배당하는 과정을 공유화로 인식하고 포괄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공유지가 화폐적 형태의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공유지에서 화폐적 형태의 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 방식의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공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인클로저에 대항하여 시장 방식으로서의 전환을 막아내고 시장화된 시스템을 공유지 시스템으로 재전환하는 공유화는 가장 중요한 방식의 공유화이자, 가장 근원적인 공유화이다. 공유지에서 화폐적 형태의 부가 나올 경우, 기본소득 방식의 배당으로서의 공유화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동아시아.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고양: 박종철출판사.
- 라인보우, 피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역, 서울: 갈무리.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라인보우, 피터, 2021, *도둑이야: 공통장, 인클로저 그리고 저항*, 서창현 역, 서울: 갈무리. [Linebaugh, P., 2014, *Stop, Thief!: The Commons, Enclosures, and Resistance*, Independent Pub Group.]
- 볼리어, 데이비드,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배수현 역, 서울: 갈무리.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 서정희·안효상, 2021,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비판사회정책*, 73: 79-117.
- 서정희 · 이지수 · 안효상 · 조광자 · 한인정, 2023,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2), 121~157.
- 스탠딩, 가이, 2021,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안효상 역, 파주: 창비. [Standing, G., 2019, *Plunder of the Commons: A Manifesto for Sharing Public Wealth*, Penguin Books Ltd.]
- 오스트롬, 엘리너,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 De Angelis, M., 2017,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London: Zed Books.
- Foster, S. R., and Swiney, C. F., 2021, “Introduction: Commons resea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beyond”,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Commons Research Innovations*, edited by Foster, S. R., and Swiney, C. 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yak, P. K., and Berkes. F., 2011, “Commonisation and decommonisation: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change in the Chilika Lagoon, India”, *Conservation and Society*, 9(2): 132-145.
- Standing, G. 2022, *The Blue Commons: Rescuing the Economy of the Sea*, London: Penguin.

함께자리

천양희
시인

함께자리
천양희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으면

너는 완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세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같은 밝기로

빛나는 별처럼

좋은 한 번 울릴 때

여러 번 침묵을 뺏는다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으면
너는 완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세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같은 밝기로
빛나는 별처럼
좋은 한 번 울릴 때
여러 번 침묵을 뺏는다



울음 악보

천양희
시인

울음 악보 천양희

한 그루 울음
울음 한 그루는 돌레가 없으므로
안을 수가 없다

일생을 울다 보낸

저 물결도

흐르고 흘러 수없이 흘러도

울음 앞에서는 한 겹 흐름일 뿐

울음이 웃음으로 피어날 때처럼

절경은 없다

울음도 절창하면 웃음이 된다

나는 울음을 풍경처럼 입고

피어나는 사람

나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¹⁾

* 뫼세의 시에서

때때로 내가

한 그루 울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1) 뫼세의 시에서

이상한 열매

최지인 시인

그 애 사촌이 자꾸 시비를 걸었다. 그 애가 울음을 터트렸다. 그 애 남자친구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만, 그만 하세요. 그 애 사촌과 나는 비상계단 바닥에 뒹눴다. 입술이 터졌고 셔츠 단추가 뜯겼다.

맨 처음 그 애는 내가 좋다며 울었지. 나는 예배 중에 나와 전화기를 붙잡고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았다. 영원에 관한 이야기들. 어느새 현금함이 예배당을 돌고 있었다.

골목 귀퉁이에 숨어 담배를 태웠지. 길고양이가 다리 사이를 오가며 뺨과 이마를 비볐다. 꽃과 초콜릿을 사 왔어. 그 애가 비틀거리며 번화가를 걸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랑 같은 건 몰랐을 때였다.

중개인이 손님을 데리고 집에 왔다. 이제 떠나야 했다. 너는 몇 번이나 몸을 씻었다. 네가 씻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식은 피자를 먹었다. 다음 날 집을 챙겨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네가 빌려 간 잠바는 결국 받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다 타버린 생각들을 뒤적였다. 짝사랑하던 선배의 애인은 영화감독이었다. 선배는 시사회 사진을 보여주며 손끝으로 그를 가리켰다. 열차가 강을 건넜다. 나랑 사귄래? 위험한 것에 맞서는 부르튼 입술들.

뒷주머니에 넣은 머리핀 장식이 깨졌다. 편지를 몇 통 받았지만 이사하면서 버렸다.

왜 너는 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지?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춘다. 배낭에서 쏟아진 책과 잡동사니. 몸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바위의 얼굴. 그리고 남겨진 것.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도 미래는 계속 생겨났다.

• **최지인:** 2013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10회 조영관 문학창작기금을 수혜하고 제40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다. 창작동인 ‘뽕’과 창작집단 ‘unlook’에서 활동 중이다.

이웃들

조경란

소설가

명함을 새로 만들 때 양지는 ‘스페인어 전문 번역가’에서 망설이다가 ‘전문’이란 표현을 뺐다. 그러자 자신의 이름 밑에 스페인어 번역가라는 단출한 표현만 남았는데 사실 그건 직업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양지가 거의 백수에 가깝다고 알아차릴 거였다. 전 명함에는 스페인어 강사였지만 강사법이 바뀐 이후로 더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얻지 못했다. 학위도 부족했던데다 벌써 마흔일곱 살이나 됐잖아. 조금은 자조적인 기분이 돼서 양지는 새 명함을 찍을 때 엄마 가게 상호를 덧붙이는 상상을 했다.

양지와 엄마가 삼십 년도 넘게 살았던 데를 떠나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건 십 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엄마는 아는 분의 소개로 시장 한쪽의 빵튀기 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재래시장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달리 체격만큼이나 책임감도 큰 사람이었다. 원래 일하던 분들이 엄마에게 가게와 기계를 팔고 고향으로 떠나자 엄마는 가게를 인근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도록 단장했다. 빵튀기 기계를 최신식으로 바꾸는 데만 해도 큰돈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마의 혜안이 맞았다. 봉어빵 장수가 줄어들어 귀해졌듯 빵튀기 장수도 줄어들어서 이제 먼 데서까지 소문을 듣고 묵은쌀이며 콩을 들고 손님들이 찾아왔다.

강사 자리를 잃고 나서 양지에게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 집에서 걸어서 십오 분 거리인 가게로 나가 아홉 시에 문을 열고 빵튀기 기계를 예열시키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한 시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고 두 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후 엄마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저녁 여덟 시까지 양지는 혼자 있을 수 있었다. 나가야 할 데도 오라는 데도 없는 사람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다. 공저로 번

역서가 한 권 나온 적은 있어도 단독 번역자로 일거리를 맡은 건 행운에 가까운 일이었다. 동네 지명이 행운동이었다. 이런 행운이 더 자주 생긴다면 책상 앞에서 살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고 양지는 내심 기대했다. 그 오후와 저녁 시간 동안 양지는 성실한 사무원처럼 번역에만 매달리고 싶었다.

아직 하지도 이주나 더 남은 수요일에 이미 이상 기온으로 31도까지 올랐다. 가게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티셔츠가 땀범벅이 되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책상으로 돌아가 본업을 시작해야지. 양지는 날마다 계획을 세웠다. 매일 엇비슷한 계획이긴 해도 결심은 날마다 필요했다. 골목은 경사가 좀 심한 편이었다. 바로 이웃집과도 거의 반 층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이층 양지 집으로 올라가는 현관에서 맞붙어 있다시피 한 아랫집 옥상이 바로 내다보였다. 엄마와는 안면을 트고 지내는 듯했지만 양지는 그녀와 제대로 인사를 나눠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랐다. 아랫집 주인은 제 집 옥상에도 무관심한 사람이었으니까.

현관문을 열다가 양지는 뭐지? 하며 아랫집 옥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웅크리고 있어서 말아 놓은 검은 털 뭉치처럼 보이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땡볕에 누워 있었다. 익숙한 동네 고양이들이 그래도 이럴 땐 머리를 치켜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현관문 소리에도 검은 고양이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

덕진은 윗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체로 낮 두 시 십오 분 경이면 뽁뽁한 대문을 열쇠로 힘들게 열었다가 닫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에 기름칠하거나 손을 봐야 하는 데 모녀 모두 그런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덕진은 지하로 이어지는 골목 밖 셔터에 당분간 가게를 쉰다는 안내문을 붙여두었지만 작업 테이블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전에 친정엄마 기일이 있었다. 형제들은 많아도 아무도 엄마의 기일을 기억하지도 밥 한 그릇 올려두는 자식들도 없었다. 덕진을 제외하곤. 작은 나무 상과 제기들을 꺼내느라 먼지가 쌓인 냉장고 위로 손을 뻗을 때 한꺼번에 제기 상자들, 나무 상이 떨어졌다. 덕진의 오른쪽 발등으로.

발등뼈에 금이 갔다. 김스를 육 주나 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부터 덕진은 양쪽에 목발을 짚은 채 방과 거실과 부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골목의 경사 때문에 지하로 보이는 옷 수선 가게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도 휘어지고 낙차가 심한 옥상 철제 계단은 엄두를 내지 못해 빨래를 실내에서 말려야 했지만. 경수는 출근할 때마다 유니폼인 나일론 조끼에서 쿼쿼한 냄새가 나

는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퇴근할 땐 참외나 하지 감자(아직 하지도 아닌데 하지 감자가 나온다는 게 이상했지만), 양념한 고기 등을 사 오곤 했다. 제 엄마가 시장을 가지 못하게 된 데다 온라인으로 먹거리를 사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한 종교 집단에 빠져 집을 나간 후부터 덕진은 지하를 개조해서 재봉틀을 갖다 놓고 밖에서 ‘행운 수선집’이란 간판을 달았다. 원래도 거기서 편물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하다 보니 옷 수선일은 두 가지가 중요했다. 수선 솜씨와 단골손님을 놓치지 않는 기술. 동네 사람이라면 더 그랬다. 경수가 취업반일 때였고 대학을 포기한 아들에게 생활비 부담까지 떠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선할 옷들, 수백 장의 편물 속에서 하루가 갔고 덕진은 큰 불만이 없었다. 남편이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경수는 덕진에게 집 계약서와 도장을 압수한 뒤 한 번만 더 아버지를 집에 들이면 자신을 평생 못 보게 될 거라고 선언했고, 덕진이 아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고야 말 거였다.

덕진은 특히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려고 했다. 옆집만은 약간 예외였는데 자신과 나이가 대가 엇비슷해 보이는 딸 때문일지 몰랐다. 집이 워낙 붙어 있다시피 해서 여러모로 서먹하게 지내지 않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칠십이 넘은 엄마라는 사람은 차갑고 좀 도도해 보이는 딸과 달리 목소리도 크고 시원시원한 데다 수선이 필요한 옷가지들을 갖고 찾아와 수다를 떨어 다행이었다. 딸이 술에 취해 골목에서 꾸그려 앉은 채 잠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김스한 지 이주 뒤쯤인가 오전 시간에 “애기 엄마 어디 아파요?”라며,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수가 출근할 때 살짝만 달고 나간 대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도 옆집 아주머니였다. 경수가 스무 살인데 동네 나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신을 애기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덕진은 조금은 웃기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수선 가게 셔터가 계속 내려져 있어 걱정돼 왔다며 딱 한 봉지를 내려놓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던 덕진은 아주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아주머니의 딸 이름과 나이를 덕진은 그날 슬쩍 물어보았다. 그 나이에 머리에 장식이 달린 실핀을 꽂고 다니다니. 덕진은 자신보다 서너 살 아래인 윗집 딸이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았다.

*

양지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십 도가 넘었는데 아랫집 옥상의 길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엄마 가게로 출근할 때도 고양이는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다. 돌아와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딘가를 다쳤다가 앓다가 죽은 게 분명했다.

오늘 오후부터는 뭔가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았다. 엄마 말에 의하면 아랫집 여자가 김스를 풀려면 일주일도 더 남았다. 그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 길고양이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뿐일 텐데, 양지는 지난번처럼 엄마를 시켜 그 집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에 그랬을 때 여자가 좀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엄마에게 이런 소릴 했다고 했다. 따님이 참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인가 봐요.

두어 달 전에 사흘 연속으로 퍼붓듯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다. 아랫집 여자의 남편이 집을 나갈 삼 년 전부터 집을 손보는 사람도 옥상 바닥에 방수 처리를 다시 하거나 배수구를 살피는 사람이 없어 보였다. 아랫집 옥상 바닥 전체에 고인 물이 일주일도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양지는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이는 아랫집 옥상이 신경 쓰였다. 배수구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데, 아무도 옥상에 올라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 삼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 남편이 가끔 옥상에 올라와 이것저것 살피고 담배도 피우다 내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양지는 엄마에게 아랫집 여자에게 옥상에 물이 고여 있다고 알리라고 시켰다. 아랫집에 다녀온 엄마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원래 그 집을 때부터 배수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두래, 시간 지나면 물이 빠지지 않겠냐고.

양지는 옥상에 고인 물이 집 전체로 스며들다 마침내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

내 집 옥상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고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양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랫집 여자는 양지에게 그런 이웃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고양이라니.

하지만 어떤 좋은 이웃도 있었다.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언젠가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간신히 골목을 올라가는 자신을 양지 집 대문 안으로 안전하게 밀어 넣어 준 사람도 있었다. 이 골목에 사는 사람일 텐데 양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이 그뿐이었고 이제부터 아버지 기일에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일은 그만둬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아버지 생각이 또 났다.

아버지는 한강 하구에서 어부 일을 했다. 삼십 년 동안 아버지는 어부라는 직업에 자신을 종사시켰지만 그 일엔 투신한 시신을 때때로 발견해 경찰에 넘겨야 하는 의무도 포함돼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부력에 의해 물에 떠 오른, 부패가 진행된 사체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아침 조업을 하다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십 대 청년의 시신을 발견한 게 마지막이었고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었다. 죽은 사람을 보는 일은 고통이라고 했던 아버지는 어쩌서인가 자신의 삶도 버렸다. 그게 십 년 전이었다. 아버지 기일마다 양지는 엄마를 피해 밖에 나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곤 했다.

저 길고양이는 어쩌다 죽은 것일까.

오후 여섯 시. 양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닐장갑과 큰 봉지 하나를 주머니에 챙

기곤 현관문을 열었다. 골목에서 음식 냄새들이 풍겼고 바로 코앞 아랫집 여자의 옥상에서는 죽은 길고양이 사체가 방치돼 있었다. 여자는 자신의 옥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너무 늦다. 양지는 계단 난간의 폭이 좁은 시멘트 돌출부를 딛고 허락 없이 이웃의 옥상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에는 되레 기온도 습도도 내려가서 부채 바람으로도 견딜 만했다. 요즘 소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덕진은 한쪽에 목발을 짚고, 한 손에는 형겅 가방을 짊 채 골목길을 천천히 내디디며 걸음을 옮겼다. 덕진은 농사를 지었던 부모 때문인지 절기에 민감했고 6월에는 망종과 하지와 단오를 보내면 한 달이, 이달 7월은 소서 지나면 초복과 중복, 대서를 보내면 한 달을 사는 거라고 여기곤 했다. 자신의 삶은 그런 하루하루와 이 동네 근처에 있었다. 아직 시장까지 가긴 무리고 골목 아래 편의점까지는 그럭저럭 오갈 만했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달걀과 우윳값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렸다.

골목 끝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덕진은 목발을 더 신중히, 마치 땅이 안전한지 두드리기라도 하듯 조심조심 짚었다. 반대쪽에서 뒷집 딸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이름이 양지라고 했다. 그녀 쪽에서 먼저 이제 걸어 다니셔도 돼요? 라고 아는 척을 했다. 덕진은 자신의 몸골이 어떻게 보일지 뻔해 고개를 수그리듯 끄덕거렸다. 뒷집 딸은 일이 너무 안 돼 주민센터 앞 놀이터에 좀 앉았다 오는 길이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서 덕진도 지난봄에 옥상 일 신경 쓰이게 해 미안했다고 말해버렸다. 덕진이 빨랫줄에 빨래 널 때마다 줄을 닦을 마른걸레 위에 버리기 아까운 검정 니트 긴바지를 집게로 같이 걸쳐두었는데 아주머니가 찾아와 망설이는 어조로 말을 전했다. 딸애가 가끔 밤에 보면 그게 길게 늘어진 사람 형체같이 보여 깜짝깜짝 놀란다고. 덕진은 어쩐지 기분이 상해 이틀 후쯤에서야 그것들을 치웠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지 여자가 네에, 하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뭐든 잇길 잘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목발을 고쳐 짚고 여자와 엇갈려 헤어지기 전에 덕진은 이렇게 물었다. 저기, 괜찮으신 거죠? 네? 아니 그냥요. 덕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마저 길을 내려갔다. 여름이 시작돼 그런지 덕진의 눈에는 뒷집 딸이 좀 아위어 보였다. 덕진은 그녀의 체중을 기억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한쪽으로 붙잡고 가방을 뒤적여 열쇠를 찾아 뒷집 대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낼 때까지 덕진에게 완전히 맡기고 내맡기고 있던. 왜 그러셨어요, 왜, 왜, 왜. 여자의 술주정도 아직 기억하는데.

덕진은 왼쪽 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손으로 경수의 나일론 조끼 두 장이 든 가벼운 세탁 바구니

니를 들고 집 뒤를 돌아 철제 난간을 한 칸씩 밟곤 옥상으로 올라갔다. 목발이 없이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데, 내 집 옥상에 올라가 햇빛 속에 빨래를 낀다는 사실 때문에 순간 행복했다. 지난 번 이른 장마로 옥상 바닥의 방수 칠이 더 벗겨졌지만 누가 비질까지 한 것처럼 깨끗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스티로폼 상자에 풋고추 모종이며 상추, 가지, 대파, 방울토마토를 심기도 했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덕진은 옥상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윗집 모녀가 없을 때면 바닥에 두 다리를 펴고 앉아 골목을 내다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적은 없었지만 숲으로 피크닉을 가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앉은 기분으로. 일 미터도 안 되는 거리라 윗집 모녀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부터는 마음 놓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옥상에 서자 덕진은 그래도 자신에게 이 집은 남았다는 큰 안도감이 들었다. 윗집 모녀가 빵튀기 가게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었다. 아주머니가 떡을 갖고 자신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덕진은 시장에 가는 대로 모녀의 가게에 들를 작정이었다. 덕진은 쌀 튀밥보단 예전에 엄마가 즐겨 먹었던 검은콩을 튀긴 걸 더 좋아했다. 기계를 한번 돌리는 데 팔천 원, 재료는 쌀이든 콩이든 무조건 2kg이 기준이었다. 국산 서리태 2kg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덕진은 바삭 마른 옥상 난간에 주춤거리며 앉았다. 왼쪽 다리부터,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쪽 찼다. 바닥에 뭔가 작고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덕진은 팔을 뻗어 그것을 주웠다. 새끼손톱만 한 나비 모양의 큐빅이 끝에 붙어 있는 실핀이었다. 윗집 딸의 머리핀이 왜 여기 떨어져 있는 걸까? 덕진은 실핀을 가볍게 머리에 꽂곤 자신이 보지 못한 무엇이 또 있는지 반짝이는 눈으로 옥상을 둘러보았다. <끝>



현대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고 자신의 몫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의제와 운동은 언제나 국제주의를 머리와 가슴에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뚜렷한 예가 범 아프리카주의 같은 디아스포라의 운동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사회운동으로 여겨지는 노동자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착취와 억압이 (국제 노동 분업에 따른) 지역적 차이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양상에 따른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추동력과 메커니즘 자체가 세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주의가 취할 수 있는 제도의 한 가지 형태가 대회(congress)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리는 대회는 우선 구체적 정세 속에서 해당 운동의 공통 과제를 도출하고 선언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대회를 여는 일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운동일 수밖에 없다. 대회 자체가 국제주의 운동의 제도 형태라 한다면, 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운동의 결절점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결절점의 색깔을 규정하는 주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개최지(호스트) 운동의 지향과 역량이다. 개최지의 운동이 해당 운동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향, 즉 좀 더 급진적이거나 아니면 개혁적이거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동의 대의를 구성하는가, 개최지 국가 내에서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영향력을 어떠한가 등이 해당 시기 대회의 성격, 규모, 의미 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월드코인과 기본소득,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 이번 호 팔매통신은 지난 달 샘 알트먼 방한에 맞춰 입방아에 오른 ‘월드코인’을 다뤄보고자 한다. 알트먼은 한국 행사에 참여해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기술혁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변화에 우리는 적응해 왔다. 문제는 속도다. 발 빠른 혁명에 적응하기란 어렵다, 월드코인”을 통한 기본소득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오른 건 기뻐할 만한 일인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과연 월드코인은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라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실현할 열셋말일까? 혹은 위험한 유사품일까?

1) 월드코인은 2019년 샘 알트먼이 공동창업자(알렉스 블라니아)와 설립한 블록체인 재단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이 인증에 참여한 사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나눠준다. 일단 홍채 인식 기기 ‘오브(orb)’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개인별 ID(월드 ID)가 생성된다. 발급된 월드 ID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고 여기에 가상자산인 ‘월드코인 토큰’을 보관할 수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현재 신규 가입자들에게 무상으로 일정량의 토큰을 지급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14일 취재원을 통해 “샘 알트먼이 월드코인 사업에 약 1억 달러(약 1천 338억 원)규모의 투자를 유치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월드코인은 지난 8일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자산 관리용 지갑 앱인 ‘월드 앱’을 전 세계 80여개 국에 출시했다.

테크노 마르크시스트와 기본소득

먼저 월드코인 이야기에 앞서 샘 알트먼에 대해 알아보자. 8살 때부터(학) 코딩을 공부했다는 알트먼은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다 자퇴한 뒤 2005년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공유 소셜회사 루프트를, 2011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회사 오케이큐피트를 공동창업해 이를 각각 560억 원, 6조 5천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Y콤비네이터²⁾ 대표를 맡았으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듯, 챗 GPT를 개발한 오픈AI의 CEO 자리에 앉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 정도 소개를 한다면, 소위 ‘기덕(기본소득덕후)’로서 그와 기본소득의 인연을 살펴보자. 그는 Y콤비네이터 대표 시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 기술 확산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가 빅테크에 집중되는 불평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기본소득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즈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브라더스^{Basic income bro}’로 불렸으며, 심지어 테크노 마르크시스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저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료주의와 자격요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상일 뿐입니다. ... 저는 기술이 계속해서 전통적인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함에 따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국가적 규모로 UBI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우리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을 할까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까요? 행복하고 더 성취감을 느낄까요? (샘 알트먼, 2016.1.28. Y콤비네이터 블로그)”

실제로 그는 기본소득 연구에 적극적 투자자다. 그는 Y콤비네이터 대표 재직시절 비영리기관 Y콤비네이터리서치를 설립해 2016년 캘리포니아 오كل랜드에서 10여 가구를 선정해 1년 동안 무조건적으로 매달 1천 5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으며, 2018년 8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2차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그가 CEO로 있는 오픈 AI는 2020년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인 기본소득 재단^{UBI Charitable}에 2020년 1천 만 달러를 지원했고, 오픈리서치에 2021년 7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연구팀은 그간의 기본소득 실험 표본이 너무 적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

2)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을 키워낸 실리콘밸리 최대 투자기업이다. 당시에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 하여 기본소득론자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험을 통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2개 중에서 약 3천명을 모집하고 이 중 1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2천명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3년간 매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자급자족 및 웰빙의 변화 결과를 측정하고, 개인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소득이 자녀와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인의 경험, 의사결정 과정, 직면한 제약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월드코인과 기본소득: 자유와 평등의 만남인가, 자선행위를 가장한 데이터착취인가

“월드코인은 모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공공 유틸리티로서, 세계 최대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능케 해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미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길 바랍니다.” (월드코인 홈페이지 환영사)

기본소득에 (나름대로) 진심인 샘 알트먼은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며 일자리가 소멸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기술을 활용해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보통 우리가 은행거래를 할 때 활용하는 생체인증 보안시스템을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AGI³⁾가 나온다면 디지털 상에서 AGI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다. 이 때 월드 ID(홍채인식)가 인간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이야기다. 공동창업자인 블라니아는 “현재 월드 ID가 있으면 월드코인을 나눠주고 있는데, 사람이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며 “사회가 AGI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과 기계의 역할 구분에 대한 답이 없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은 12개국 사람들에게 구 모양의 장치를 배송했고, 오브^{Orb}라고 불리는 홍채인식 장치는 사람들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여 짧은 숫자 코드로 변환하고, 이 코드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오브로 홍채 인식을 완료하면, 인식한 사용자는 월드 ID를 갖게 된다. 월드 ID는 디지털 세계의 인터넷 여권처럼, 개인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월드 ID를 통해 신원이 인증된 사람은 ‘월드 앱’을 통해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할 수도 있다. 만약 한국에서 월드코인에 가입하려면 홍채 인식 장비^{Orb}를 갖춘 업체(국내는 비더시드, 분당 서현역 근방)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3) AGI는 인공지능(AI)을 넘어서 범용인공지능이라고 불린다. AGI는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학습하고 창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한다.

“월드코인을 전 세계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활성사용자 1억명을 넘기면 네트워크가 구축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월드코인 공동 창업자, 블라니아)

현재 월드코인은 199만 2천 명이 가입한 상태⁴⁾로 2023년까지 사용자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샘 알트먼은 월드코인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에게 은행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선전한다. 현재 월드코인은 10억 명의 사용자를 모아 월드코인 토큰으로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갖추게 되면, 수익의 20%(토크노믹스 팀과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편적 기본소득UBI 형태로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날선 비판도 만만찮게 쏟아진다. 가장 먼저 중요한 월드코인(토큰)의 사용처나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은 점 때문에, 과연 이 방식으로 UBI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생체 인식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월드코인의 사용자 모집이 인도네시아, 케냐, 수단, 칠레와 같이 빈곤률이 높은 남반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라는 명목 하에 데이터 헤게모니 세력이 방대한 데이터 매장량을 전유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과거는 현재의 것이 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당이 예언한 모든 것들은 문서상으로 증명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맞지 않는 기사나 의견은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되었다. 말하자면 모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깨끗이 지우고 다시 고쳐 쓰는 양피지 위의 글씨와도 같은 것이었다. 일단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의 허위가 섞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중)

이러한 비판들을 종합해 탄생한 이미지는 ‘홍채인식 시스템 Orb와 조지오웰의 빅브라더’의 콜라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웹상의 많은 글들과 전문가들은 월드코인에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필자 역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고 블록체인 관련 지식이 적은 관계로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려웠다.

*팔매의 한(두)마디

이처럼 한 쪽에선 오랜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칭송받지만, 한 쪽에서는 디스토피아

4) 23년 7월 11일 기준.

적 음모로 불리는 월드코인. 당장의 실현 가능성을 넘어 제일 비판할만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기술적 논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런 속도로 가다보면 탈중앙화라는 명목 하에 지금껏 쌓아온 수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코인 논란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며 뒤로 물러서 있기엔 꽤나 큰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월드코인을 배격하자는 식으로 글을 마쳐야 할까?

아니다. 나는 그의 생각에 대해 듣고, 그의 이력을 읽어가며. 그가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월드코인의 배격 혹은 승배를 넘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싶어졌다. ‘기술이 더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샘 알트먼을 찾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초대장을 건네주고 싶다. 짧은 편지, 이 세계 어딘가 끝 끝내 남아있을 희망과 함께.

“알트먼씨, 당신이 바라는 세계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내는 자유와 평등의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온전히 같지도, 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디스토피아처럼 보이는 세상에 꾀꾀 숨겨진 신비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에 꽤 오랜 시간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져 온 장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곳에서 당신의 세계, 그리고 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꼭 이 대회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신비로움을 조금이나마 엿본, 팔매 드림)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개조시킬 수 없듯 그들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하더라도, 인간의 속마음까지 공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마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중)



녹색 정치에는 조국이 없다

-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 **Global Greens Congress** 참가기

김찬휘 녹색당 대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에서 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열렸다. 세계 녹색당 Global Greens은 녹색 정당 및 운동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세계 최초의 ‘녹색’ 정당은 1972년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창당한 United Tasmania Group UTG인데, 그 후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각지에서 녹색 정당의 설립이 빠르게 이어졌고 1980년에는 독일녹색당 Die Grünen이 창당되었다.

이에 각국 녹색당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최초의 지구 녹색당 회의가 열렸다. 그때 채택된 성명서의 시작은 녹색당이 ‘정치적 힘’으로 전환될 때에만 지구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환경정당에 투표할 때에만 정부는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녹색당의 국제적 연대는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세계녹색당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제1차 총회는 세계녹색당헌장 Global Greens Charter을 채택하고 6개항의 핵심 가치를 승인 하였는데, 이로써 전 세계의 녹색당이 함께 지키고 실천해야 할 대원칙이 천명된 것이다. ① 생태적 지혜 ② 사회정의 ③ 참여민주주의 ④ 비폭력 ⑤ 지속가능성 ⑥ 다양성 옹호가 그것이다.

결국 세계녹색당이란 이 6대 가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녹색당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세계녹색당 내에는 다시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미주녹색당연합, 아프리카녹색당연합, 유럽녹색당 등의 대륙별 연합이 존재하며, 세계녹색당총회가 열리면 대륙별 연합 총회도 함

게 열린다. 1차 총회가 호주, 2차 총회가 브라질, 3차 총회가 세네갈, 4차 총회가 영국에서 열렸으니 각 대륙별 연합에서 한 번씩 열린 셈이며, 아시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총회는 총회 개최부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총회가 2년 연기되었으며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로 비행기를 타고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인터넷 상황의 격차와 통신의 불안정성, 시차의 문제, 그리고 온라인 회의 진행시 발생하는 언어적 장벽과 비언어적 소통의 배제 등의 문제가 고려되었다. 결국 오프라인 참여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최초로 오프라인+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행사를 열게 되었다. 이런 고민이 있었기에, 아마도 이번 총회가 마지막 오프라인 총회가 될 수도 있다.

드디어 6월 8일의 아침이 밝았다. 총회 복도에는 기후위기 시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과 식물들의 종이 조형물이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첫 행사는 오전 10시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의 포럼이었다. 포럼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의 선주민 조직인 First Nations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시에 개회식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3박4일의 총회 행사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 84개국 700여 명의 녹색당원들이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수십 개의 세션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세션들로 ‘탈성장과 녹색정치’, ‘그린 AI: AI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 ‘에코사이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법적 체제’, ‘녹색 경제’, ‘후쿠시마와 태평양의 핵 폐기물: 핵은 답이 아니다’, ‘글로벌 그린즈: COP, UN, 그리고 국제적 영향’, ‘생물다양성’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 법제화와 관한 논의는 매우 의미가 컸다. 에코사이드의 정의는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손상, 파괴 또는 손실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평화로운 향유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코사이드를 국제형사재판소의 다섯 번째 ‘국제 범죄’로, 혹은 국가 법률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뒤에 숨은 주요 환경 파괴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에코사이드 세션에서는 ‘Stop Ecocide International’의 창립자인 조조 메타Jojo Mehta, 벨기에 생태당 국회의원 사무엘 코골라티Samuel Cogolati, 전 브뤼셀 환경장관 에블린 하위테부르크Evelyne Huytebroeck, 성공회대 황준서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일본 녹색당원은 후쿠시마 사고가 에코사이드라 말했고, 제주의 녹색당원은 강정 해군기지도 에코사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는 마지막 날 우크라이나 카흐카Kakhovka 지역의 댐 폭파와 관련된 생태적 위기를 ‘에코사이드’로 규정하는 긴급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는 현장 개정을 포함해 에코사이드, 기후비상사태, AI, 생물다양성, 동물권, 여성·청년·아동·선주민·GBTQ의 권리 등에 관한 19개의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했다. 특히 호주녹색당과 일본녹색당의 제안으로 진행된 ‘태평양의 핵폐기물 위협’ 결의안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25만여t이 태평양으로 배출되도록 허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규탄”하며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 연안 주민들의 건



강과 태평양의 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육상에 저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을 기초로 6월 30일 한국녹색당과 일본녹색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공동선언문과, 이에 대한 7월 8일의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의 서명 승인이 이어졌다.

국제적 행사의 백미는 ‘만남’이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의 녹색 정치인과 기후 운동가를 만났지만, 그 중에서 르완다 민주녹색당 대표 프랭크 하비네자(Frank Habineza)를 잊을 수 없다. 2018년 9월 그는 다른 녹색당원 한 명과 함께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르완다의 물과 위생, 환경,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서 영국과 미국이 자행하는 목재 남벌을 폭로하고 이를 지원하는 르완다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실제로 민주녹색당의 부대표가 2010년 비참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늘 웃고 있었다. 하비네자를 응원하며 그의 안전과 행복을 빈다.

촉촉한 총회 기간의 일정 속에서도 한국녹색당 대표단은 잉글랜드웨일스녹색당, 일본녹색당과의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잉글랜드웨일스녹색당과의 간담회는, 2023년 5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240명에서 481명으로 늘린 녹색당의 선거운동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일본녹색당과의 간담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한 자리였다. 간담회는 약속되었던 시간을 훌쩍 넘어서 진행되었고, 진지하면서도 애정 넘치는 녹색당만의 힘과 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한국녹색당 전당대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당대회는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생명체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잊혀진 이름’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김반장과 원디시티’의 흥겨운 레게음악과 함께 신명나는 파티와 각 지역당의 행렬이 이어졌다. 각 정당에서 온 대표님들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전당대회를 즐겼다. 2부는 조천호 박사, 홍세화 선생, 김주은 전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전국의 당원들의 자유발언들이 이어졌다. 나는 왜 녹색당원인가, 녹색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함께 묻고 함께 대답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창당 이후 처음 진행된 전당대회… 가슴이 열리고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정말 녹색당다운 전당대회였다.

11일 일요일, 총회는 ‘한국 선언’을 채택하고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총회의 주요

참가자들과 한국녹색당 대표단은 월정사로 이동하여 템플 스테이를 같이 하고 숲길을 걸으면서 뜻 다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

기후위기가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들과 UN 등 국제기구는 수 십 년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그린즈는 국제적 연대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세계적 연대체이다. 그런 만큼 녹색당과 녹색당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 또한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그린즈 대사이자 전 호주녹색당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밀느Christine Milne는 “강대국과 대기업과 군대와 같은 조직의 세계화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녹색당의 연결도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처럼 녹색 정치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곳에서는 의회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카탈루냐 자치구 등에서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 또한 느껴진다. 그러므로 ‘전환’은 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집, 광장, 의회. 이 세 공간에서 동시성과 교차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되는 전환의 녹색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녹색당은 균열과 반목을 뛰어넘어 전환의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막고, 파괴되는 생태 현장을 지키며, 핵발전과 핵무기를 없애고,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며,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꿈



이경수 문학평론가 · 중앙대 교수

1.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져 있었다. 코로나 -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짐작했음에도 달라진 세상을 날마다 실감하는 중이다. 3년간 이어진 비대면 일상은 어느새 익숙해져 우리 일상을 바꿔 놓았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직장도 많아졌고 대학의 경우 학생 자치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물론 대면의 일상이 가져오는 피로감으로부터 얼마간 해방된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회식이 줄어드는 등 이른바 ‘꼰대 문화’에서 벗어난 순기능도 없지는 않지만, 직접 맞닥뜨리는 일이 줄어들다는 건 한편으로 효율성이 그만큼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함께 복닥대며 어울린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따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함께함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연대감과 협업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 온전히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경험은 사실 드물다. 나 역시 기질적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더불어 도모하는 일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했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긴 비대면의 시간을 지나 차차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온전히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회복 탄력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풀어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각자의 세계에 안주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는 상충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심해졌다. 세대 간의 갈등도,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좀처럼 해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기회만 된다면 누구나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투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돈

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기후 위기가 당장의 현실이 되었음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아직도 성장과 개발을 추구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각자 원하는 미래가 다르고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세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일 텐데 우리 사회는 점점 성공의 기준이 획일화된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모두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려 기를 쓰는 사회.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회. 안전하지 않은 노동 현장으로 가진 것 없는 젊은 세대가 내몰리는 사회. 다치고 죽고 자살하는 청년 세대가 늘어가고 있지만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사회. 피로가 누적되고 일 중독과 번아웃 상태로 스스로를 내몰게 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를 영원히 저당 잡힌 사회. 불안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그야말로 잔혹극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도래했다. 어쩌다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을까? 과연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2.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전율을 지금도 기억한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우리 사회는 몸집은 빠른 시간 안에 키웠지만,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갈 길이 먼 사회였다. 제대로 된 복지라는 것을 누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낮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면 아니,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린 세상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했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몰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아직 믿는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으로 내몰리는 일은 늘 있어 왔다. 운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또는 남다른 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먼 길을 돌아서라도 꿈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아득해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시간조차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과 조건이 누군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사치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알아 버린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청년이 꿈꿀 수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간 후에도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 사회에서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것을 요청받는 삶. 거기에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꿈이 깃들 자리는 없어 보인다.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앞

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미 많은 문학작품에서 던진바 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거나 늦추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실용과 효율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는 낭만도 진지함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대로 간다면 공멸은 불 보듯 뻔하다. 이 세계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당장 멈춰야 할 때라고 절박하게 외쳐도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식의 막무가내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려고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다 우린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주저앉기에는 아직 이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 아니겠는가.

기본소득이라는 꿈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병들어 있다. 모두가 아픈데 다들 아프니 아픈 줄도 모르고 늘 해오던 대로 자신을 닦달하고 주변인들을 닦달하고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라 많은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 자기 성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꿈꾸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공존과 공생이라는 가치 대신에 일단 나만이라도 살고 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세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가치가 우리 시대의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을 지배해 버린 것이다.

오래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연예계처럼 변해 버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난립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 다르지 않다. 목숨 걸고 경쟁하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고 빠르게 소비하고 다른 별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악순환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학계나 문단도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시스템의 문제이다 보니 한두 사람의 저항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방향을 돌리거나 멈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허탈감에 사로잡히거나 쓸쓸하게 돌아서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대로 불만 가득한 얼굴로 원망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혐오의 정동이 이토록 서로를 잡아먹다 못해 사회 전체를 쪼먹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다. 모두 각자의 지옥에 감금당해 공멸할 생각이 아니라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늦기 전에 모색해야 한다. 세상이 멸망해 버리면 혼자 살아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발 사랑하는 대상을 단 하나라도 떠올려 보자. 가족이나 연인, 친구, 자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려묘나 반려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을 조금씩 넓혀 간다면 사실상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더 나아가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더 늦기 전에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아왔다.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목격하지 않았던가?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말이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우리들 각자는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공멸하는 지구에서 혼자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생을 위해서는 욕망을 멈추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볼 수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사라져 버린 오늘의 한국 사회는 줄 세우기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지난주에 방영된 드라마 <악귀>에서 김은희 작가는 눈이 벌게진 채 남의 것을 탐하다 몰락하는 ‘아귀’들을 돈에 썩어 버린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강렬한 알레고리로 등장시켰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논리로 점점 수치심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노회한 기성 세대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 세대가 배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를 악화시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과 기회를 빼앗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섬뜩하긴 매한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일찍이 송경동 시인은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고.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의 자리를 덜어내고/ 그곳에 ‘무한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넣”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자본의 항로를 바꾸”(「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인이 아프게 말했듯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가 만든 세상이 결국 우리 아이들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셈이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퍼했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역부족이었다.

3.

그러나 아직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든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각종 혐오와 증오의 정동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기본소득의 실현이 만들어갈 다른 세상에 걸고 싶다. 그렇다. 나는 낭만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력은 떨어지는 문학하는 인간이다. 여전히 꿈꾸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시를 읽고 가르치며 시를 읽는 일이 조금은 더 세상을 낭만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기본소득의 로드맵을 오랫동안 그려오고 연구해 온 분들은 다행히 낭만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이긴 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바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기본소득 로드맵을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유부에 대한 개념 정립, 중산층의 정치적 저항을 줄일 방법에 대한 현실적 모색 등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상에 설득력을 부여해 준다.

사실상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더 망가지기 전에, 모두 아귀에 씌거나 악귀에 씌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리기 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이자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미래의 우리에게 남겨주는 일이다. 혐오와 증오와 원한의 정동에서 벗어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공존과 공생을 꿈꾸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마다 다른 삶을 꿈꾸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궈 가는 세상을 그려 본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그런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기를 쓰며 아귀다툼을 벌이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회복할 가능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제할 가능성을 기본소득을 통해 찾고 싶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저출생시대 생태사상으로서의 기본소득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민교협 회원

지난 6월 24일은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의 3주기였다. 녹색평론은 김종철 선생님에 대한 대표적 수식어다. 녹색평론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는지 처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녹색평론에서 얘기하는 생태사상 뿐 아니라 속의민주주의, 현대통화이론, 기본소득 등의 개념은 지극히 매력적이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2019년 10월 24일,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서평회에서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 아침 선생님의 부고를 들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다. 그동안 많은 글을 써왔고 대부분은 생태사상가 김종철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쓴 몇 편의 글을 소개하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생태사상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18년 4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유아교육소식지 40호’에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육, ‘사람, 장소, 환대’의 교육」을 썼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풍요를 전제한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으나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는 축소되고 있다. 노동자의 세수로 유지되는 국가는 더 이상 대안이 되기 어렵고 데이터와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게 부가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노동력은 축소되지만 부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는 지속돼야 하므로 4차 산업사회는 지속적 소비 창출을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기본소득은 논의될 수 있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기대기 어려운 세수는 로봇세, 구글세, 부유세 등 사회변화에 맞춰 재편될 수

밖에 없다. 2018년에 쓴 이 글에서는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했다. 2020년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 다양한 평가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의 회복 뿐 아니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리란 전망을 말하고자 했다. 당시 국내에서도 시도된 성남의 청년배당, 서울의 청년수당, 부산의 청년디딤돌카드 등도 함께 소개했다. 유아교육을 비롯,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은 기본소득 등 익숙한 기존의 관행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사회학자 김형경씨 책 제목 ‘사람, 장소, 환대’를 빌어 말했다.

2020년 5월 프레시안 민교협외의 시선에 <혐오, 반값등록금, 그리고 대학의 미래>를 썼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예견된 인재였으나 반복된 참사 때마다 혐오는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과 사망자를 향했다. 영유아, 장애인, 난민 등 약자에 대한 혐오의 원인을 공공성이 무너진 자본화된 교육현장에서 찾고자 했다. 서열화된 대학 졸업장이 안정된 삶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은 경쟁을 통한 각자도생을 일반화했다. 초중고등학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무상교육임에도 교육내용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대입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만 기능한다. 고등교육도 막대한 정부자금이 투입되나 대학에 대한 평가를 사적 자본이 선점하고 잠식하며 대학 또한 개인의 사적 욕망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만 작동된다. 결국 사회적 약자나 국가관리부재 혹은 국가과잉권력으로 인한 피해자 등 공적 담론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까지도 개인의 능력문제로, 경쟁에서 도태된 실패자에 대한 혐오로 귀결하는 문화는 민주주의, 시민 등 공적 담론이 부재한 학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값등록금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에서 사고하고자 했다. 소수의 학생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대신, 반값등록금으로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되 그 재원을 사립대학에 직접 지원하여 사립대학이 공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대학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2020년 8월 프레시안에 <화폐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나... ‘현대통화이론’ 따라잡기>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화폐의 기원을 소개하고 화폐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은행에 의해 신용화폐로 창조되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은행에 부채를 지고 막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국가가 화폐를 직접 발행

한다면 공적 자금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은행의 사적 자금이 되어 개인의 부로 축적되는 대신 기본소득, 기초자본 등 공적 화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대안통화 이론을 소개한 글이었다.

2021년 1월 안산뉴스에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와 경인일보에 쓴 <“그래도 애써보자”, 말의 무력함에 대하여>는 모두 안전장치 없이 삶의 벼랑에 몰린 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 년 단위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해 썼다. 온종일 일해도 어떤 일은 최저 시급에 머무르고, 아무리 원해도 누군가는 배우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다. 개인의 나태와 무능이 원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운을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구조의 나태와 무능이 이유다. 언제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이유로 청년이 밥벌이를 최우선하는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과연 이것이 능력주의로만 치부돼야 할 당연한 일인지 질문하고자 했다.

2023년 3월 경인일보에 쓴 <인공지능, 기본소득, 저출생>은 어린 나이부터 생계 때문에 학교보다는 공단과 같은 일터가 편안하다고 말한 학생으로부터 시작됐다. 합계출생률 0.78명이 위기라는 말이 무게감을 가지려면, 이미 태어난 이들이 주어진 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회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학생은 생계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일터로 간다. 값싸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으니 어떤 일터는 목숨을 담보해야 함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 죽고 또다시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운다. ‘헬조선’이라 불리며 안전망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각자도생인 경쟁 사회에서 저출생은 과연 누구에게 위기인가. 대량의 화석연료와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해 성장하는 인구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할 일을 기계로 대체해 갈 것이다. 인구의 시대는 인간의 시대로, 착취와 파괴의 시대는 공유와 회복의 시대로 변화돼야 한다면, 저출생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문명으로 적응해야 할 도전이다.

2023년 3-4월, 격월간 민들레 146호에 「저출생 시대의 유아교육」을 썼다. 저출생 시대의 유아교육은 이미 출생한 영유아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유아교육, 특히 어린이집은 노동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노동자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

우가 많다. 0~5세의 기본보육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이나 된다는 점, 부모가 원하는 경우 밤 12시까지 야간연장보육, 심지어 다음 날 새벽 7시 30분까지 24시간 보육도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모의 출퇴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 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어리 영유아를 한꺼번에 스쿨버스에 실어 등하원 시킨다. 저출생 시대의 유아교육은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영유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육중심의 노동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업과 자본은 자녀에게 노동자를 부모로 되돌려 주고, 노동자에도 부모가 자녀와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라도 양육 수당을 일정 시기까지 지급받아 자녀의 기본적 보호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파트타임, 재택근무, 육아 휴직 등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청년수당, 양육수당, 기초자본, 기본소득 등의 개념은 누군가에게는 이상적 담론으로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30년 전 생태위기가 공동체를 훼손하고 인류의 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10년 전만 해도 소수의 견해였던 기본소득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도입되어 청년수당 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저출생은 위기란 담론 역시 기존 산업사회를 전제한 낡은 두려움일지 모른다.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와 지하자원은 풍족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인간과 인간 중심의 문명은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대신 끊임없는 착취와 파괴를 택했다. 저출생은 소외되고 착취된 이들이 선택한 필연이고 결국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다. 극복을 원하거나 적응을 원하거나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상상해야 할 현 삶에 대한 극복, 혹은 새로운 적응을 위한 철학적 사상이자 실천이 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과 나

이지상

가수

‘어디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일이나?’ 도깨비불 반짝이는 여름밤, 장에 내다 팔 열무나 쪽파 단을 묶으시면 어머니는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일을 마치면 잠깐의 쪽 잠도 못 주무시고 시오리가 넘는 장터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경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내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당신 명의의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동네에 노는 땅을 얻어 경작하셨습니다. 다행히 토지세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늘 가난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을 제로섬(zero-sum)게임의 사회로 봅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누군가의 호주머니는 빈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이 정직한 댓가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빼앗긴 게 맞다면 빼앗은 것도 맞습니다. 왜 나의 노동을 빼앗는가를 말하면 불온한 자가 되지만 숫자로 된 공간에 차곡차곡 부를 쌓아온 사람들은 능력자가 됩니다. 평생의 노동을 누군가에 의해 빼앗긴 어머니의 아들인 나는 무상급식의 수혜자였습니다. 점심때 학교에서 주는 빵 한덩이를 시혜받기 위해서 나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몇 개의 서류를 준비했고 동네 반장님과 이장님의 도장을 받으러 돌아다녔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만 애초 차별이 없었다면 굳이 나누고 베풀 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별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에 족쇄를 채웠었습니다. 예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험한 말을 들었던 바리사이인(영어:Pharisees)의 뜻은 ‘구별된 자’ 또는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로부터 구별 당했던 예수의 신분은 암하레츠(Am-ha'aretz:땅의 사람들)였습니다. 프랑스의 농노들은 흰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친 흑빵을 주었습니다. 자존과 품위를 거세당한 노예들에게 신발과 흰 빵은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지배자들은 그것을 경계했었습니다. 1443년 음력 12월 훈민정음을 창제 했을 때에도 당시 차별하는 자, 구별 하는 자들은 언문(諺文)이나 반절(反切), 암글, 아햇글 등으로 명칭하며 한글을 비하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의 문자를 통한 각성은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창작년대가 대략 1612년 정도이니 한글을 통한 백성들의 수난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차별하는 자'들은 대개 부르조와 계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미개하니 이끌어 주어야 하고 훈육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구한말 개화파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그랬고 이들의 대부분은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민중을 위해, 민중과 함께'라는 구호를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스스로 민중이 되어 사는 삶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계급적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소위 '법과 원칙'입니다. 그 명분이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중국 통일왕조는 진(秦)나라입니다. '형벌은 무겁게 상은 가볍게'라는 법가(法家)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실행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가의 대표적 사상가 상앙(商鞅 기원전 390년 ~ 기원전 338년)는 거열형에 처해졌고 이사(李斯, 기원전 284년 ~ 기원전 208년)는 요참형과 동시에 삼족을 멸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서인 로마서4:13절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 합니다. 논어의 안연(顔淵)편 에는 국가의 통치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백성들의 군주에 대한 신뢰를 꼽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입니다. 2011년 당시 서울 시장 오세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 투표를 강행했었습니다. 준엄한 법과 원칙을 통한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시민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코로나 19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 동등 해서는 안된다는 차별의식의 발로입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시혜' 또는 '혜택'을 받지만 왜 국가가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삼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존재가 되는 사회에서 서로간의 신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의 모든 재정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그 돈은 애초에 국민들의 것이

었으니 모든 국민들이 받아야 함은 혜택과 시혜가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하여 우리는 늘 내가 낸 돈으로 국가가 왜 생색을 내는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1945년 가까스로 식민의 섬을 벗어나 공화(共和)로 가는 항해의 유일한 도구는 난파에 가까운 배 한 척이었습니다. 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배는 멈출 수 없었고 선원들은 가용한 모든 재료 들을 모아 배를 고쳐갔습니다. 조타실의 사람들은 선원들이 잡아올린 고기를 쟁여놓는가 하면 심지어 모자란 배의 부속품까지 빼내어 잇속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도 조타실의 명령에 불복하는 선원들을 잡아 가두고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조타실을 장악한 사람들은 식민의 섬 시절에도 지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차별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장난 배의 수리가 끝날 때 즈음이면 또다시 고장났고 대부분의 이유는 선장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한 때 달빛 고요한 밤바다를 평화롭게 유명한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리는 공구를 들고 어디서 들이칠지 모르는 바닷물과 싸울 준비를 늦추지 않고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화(共和)로 가는 항해에 정박할 항구는 없었습니다. 배를 수리할 마땅한 공간도 없이 긴 항해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예가 신발을 농노들이 흰빵을 쟁취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여깁니다.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차별당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는 신호입니다. 등급 나눔에 차별이 일상화된 우리의 자존 의식을 깨워 함께 민주(民主)와 신뢰의 장을 만들어 가는 연대의 선언입니다. 또한 마땅한 대책 하나 없이 가난한 집 한 채로 노후를 기억해야 하는 나 같은 이들의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약 없는 공화의 항해에 가장 성능 좋은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부자들에게 돈을 쓰면 왜 투자라고 말을 하고/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 왜

비용이라 말하는가

정치는 자원의 재분배/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

넘치게 받아도 부족한 사람 있고/못 받고도 말 못하는 사람 있네

당신은 여자 남자 당신은 청년 혹은 노인/당신은 소득분위 몇 구간 장
애 몇등급
빈부를 나누고 등급을 매기고/차별하고 또 그게 당연하고
꽃없는 열매가 어디 있던가/열매가 꽃을 차별하던가
시민 없는 국가가 어디있던가/국가가 시민을 차별하는게 온당한가

나에게 투자도 하지 마라/나에게 비용도 지불 하지 마라
국가가 나에게 등급을 매기면/나도 국가의 등급을 매기겠다
모두에게 자존이 있음을/모두에게 품위가 있음을
모두가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국가가 증명하는 것 기본소득
모두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국가가 확인하는 것 기본소득

기본소득,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김병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삶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비유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늘 찾아가던 식당이 갑작스레 문을 닫게 되면 또 다른 식당을 찾아 나서야 하며, 늘 즐겨 이용하던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우회로를 결정해서 회사에 도착해야 합니다. 결국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의제는 우연적인 촉발기제(trigger)와 만나 갑자기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는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최근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촉발기제를 만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분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담론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의성에 착안하였습니다. 대표적 공론의 장(arena)라 할 수 있는 미디어(media)에 12년간 노출된 기본소득 관련 사실 및 칼럼 기사를 분석하여 기본소득을 둘러싼 담론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본소득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제 담론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기는 2015년 이전까지의 시기이며 기본소득 담론의 생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시기이며,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회자가 되던 시기입니다. 제2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이며 기본소득의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기본소득 담론 형성의 성장기입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 또한 급증하였던 시기입니다. 또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표방한 사회수당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시기로 기본소득 담론의 확산기입니다.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돌아켜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수혜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은 2016년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의 등장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담론 형성기마다 담론의 전체적인 성격은 변화되었습니다. 생성기의 담론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주도된 가운데 탈노동화, 사회권 등 기본소득제의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장기로 넘어오면서 보수 진영 또한 담론 형성에 참여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이론적 논의에서 구체적 현실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확산기에 접어들면서 기본소득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populism)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또한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된 견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찬성 측은 자본주의의 한계로 인해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바라보았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용불안이 가속화될 것이기에 대안적 복지제도로써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재정부담에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부 진행된 기본소득제 실험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누군가는 디자인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실용성이나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꺼이 우리 사회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며, 다른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모르니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렵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이 따져보고 고민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제 또한 도입 여부를 두고 정책 분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기본소득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완전기본소득처럼 모든 기본소득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기본소득처럼 일부 성격만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소득제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분석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담론 형성은 우연한 사건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제가 많은 이목을 끌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치러질 주요 선거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이 정책의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러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ASIC INCOME IN REALITY

Wed.-Sat. 23-26 August, 2023 | Seoul, Korea

off-line Ewha Womans University ECC

on-line Zoom Events

"22nd BIEN Congress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현실 속의 기본소득

BASIC THE 22nd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32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